

발 간 등 록 번 호

2025-가족서비스-005호

2025 서울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

서울시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
가족분야 현장·학계·정책 협력 체계 구축

| 일시 및 장소 |

25. 10. 24. **금** 13:30~16:30

서울가족플라자 B1층 다목적홀

Program

프로그램

13:30~13:50 **개회식 및 축하**

13:50~14:50 **세션1: 주제발표**

사회자: 전진영 아나운서

“서울시 저출생 정책 방향과 쟁점”

가족 응원 “2025 서울가족서베이 주요 결과 및 정책적 함의”
이재림 서울대학교 교수

탄생 응원 “서울시 (예비)양육자 실태와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
최지은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단장

일생활균형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성과 및 발전 방안”
최현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

15:00~16:30 **세션2: 라운드테이블 토론**

좌장: 김성희 여주대학교 교수

“저출생 극복, 가족분야 협력 체계 모델 구축”

- 토론자① 윤성은 한국가족센터협회 협회장
- 토론자② 안현미 돌봄정책&젠더연구소 소장
- 토론자③ 황경란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 토론자④ 이윤정 호서대학교 교수
- 토론자⑤ 이현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자유토론

16:30 **폐회**

Greetings

환영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서울의 가족정책을 위해 헌신하시는 현장, 학계, 정책 관계자 여러분! 오늘 「2025 서울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에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가족센터장 홍우정입니다.

서울시가족센터를 비롯하여 서울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가족정책학회까지, 다섯 기관이 3년째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저출생이라는 시대적 난제를 넘어,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해법을 찾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이 한데 모인 오늘 심포지엄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인구 통계나 경제 지표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가족 안에서 안정과 행복을 누리며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는 출산과 양육을 넘어, 모든 시민의 일상이 존중받고 지원받는 포괄적인 가족 정책이 절실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그 해답을 향한 결정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귀한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와 현장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깊은 통찰과 실질적인 경험을 기꺼이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정책 논의가 더욱 구체적이고 풍성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지혜가 모여,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정책 방향을 세우는 데 기여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논의를 통해 가족이 일상 속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혁신적인 ‘서울형 가족정책 모델’이 수립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서울의 미래 가족정책을 선도하고,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4.

서울시가족센터장 **홍우정**

Greetings

인사말

안녕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정숙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2025 서울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서울시가족센터, 서울연구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와 한국가족정책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귀한 식견을 나누어주실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시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출생이라는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우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일·생활균형,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및 출산·양육지원 강화 등 사업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시 가족센터 관련 연구 과정에서는 '모든 가족'을 위한 신규 사업 기획 및 확산, 시범 사업 운영, 중앙정부와 자치구 현장을 잇는 조정자 역할 등 자치구 가족 센터가 가지고 있는 광역 기능에 대한 기대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을 비롯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기관들은 그간의 성과에 대한 격려와 함께 현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과 학계, 그리고 정책기관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관련 전문가분들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서울시에 최적화된 맞춤형 가족정책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서울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생산적인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정숙**

Greetings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원장 오균입니다. 2025 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2022년 8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보완을 거쳐 현재는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관련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연구원은 2022년부터 전담 연구조직인 「양육행복도시연구단」을 설치하여 서울시 저출생 대응 프로젝트에 대한 연차별 평가를 수행하고, “서울양육자서베이”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 정책 개선과 가족의 웰빙 증진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현장과 학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연구를 비롯한 여러 주체들의 노력이 모여, 저출생 대응 정책이 설계에서부터 평가와 환류에 이르기까지 점차 체계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정책평가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서울시와 유관기관, 학계, 현장, 그리고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미래 가족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4.

서울연구원장 오 균

Greetings

인사말

서울시가족센터를 비롯하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연구원, 한국가족정책학회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2025 서울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에 소중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출산율 감소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저출생 문제와 가족의 안정, 행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은 요원합니다. 이에 가족정책을 위해 헌신하는 학계, 현장, 정책연구 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을 직시하고,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가 매우 큼니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는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 자원 관리, 의사결정, 돌봄, 일-가정 양립 등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연구와 실천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그동안 학회가 축적해 온 학술적 성과와 현장 경험을 융합하고, 서울시가족센터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저출생 문제 극복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의 깊이 있는 연구와 열정,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적 해법 마련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심포지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논의가 지속 가능한 가족정책 발전은 물론,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여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4.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장 **김성희**

Greetings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2025 가족정책 심포지엄 「서울시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을 공동주관하는 한국가족정책학회 학회장 한은주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 초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커다란 도전이 닥설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정책과 실천을 거듭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생애단계별로 촘촘하고 포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 덕분에 2023년, 2024년 계속해서 혼인율이 증가하고, 이혼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고령자 가구도 30%를 넘어섰으며, 0~5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가족변화에 대응한 여러 가지 맞춤형 복지정책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서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때 해마다 진행되는 서울시가족센터 심포지엄은 이러한 변화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동안 운영한 서울시 가족정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며, 향후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 여깁니다. 작년에 이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연구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와 더불어 한국가족정책학회가 이러한 귀한 심포지엄을 매해 공동으로 함께 개최할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족정책은 어느 유형의 가족이든 평생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정책을 말합니다. 한국가족정책학회는 가족정책 연구자와 센터 현장 실무자 등이 교류하면서 최신 연구결과와 정보를 주고받는 학술적, 실천적 역할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세우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동심포지엄의 기획과 실행 과정을 주도적으로 한 서울시가족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동으로 함께 한 기관과의 인연도 소중히 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4.

한국가족정책학회장 **한은주**



Contents

목차

세션1

주제발표

‘서울시 저출생 정책 방향과 쟁점’

가족 응원 “2025 서울가족서베이 주요 결과 및 정책적 함의”	09
이재림 서울대학교 교수	
탄생 응원 “서울시 (예비)양육자 실태와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	43
최지은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단장	
일생활균형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성과 및 발전 방안”	45
최현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	

세션2

라운드테이블 토론

‘저출생 극복, 가족분야 협력 체계 모델 구축’

좌 장 김성희 여주대학교 교수	
토론자① 윤성은 한국가족센터협회 협회장	64
토론자② 안현미 돌봄정책&젠더연구소 소장	66
토론자③ 황경란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71
토론자④ 이윤정 호서대학교 교수	74
토론자⑤ 이현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80

[세션1] 주제발표
“서울시 저출생 정책 방향과 쟁점”

가족 응원

「2025 서울가족서베이」 주요 결과 및 정책적 함의

이재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2025 서울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

가족 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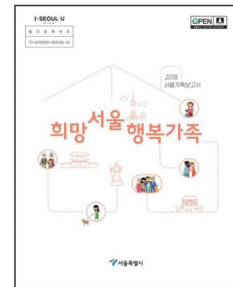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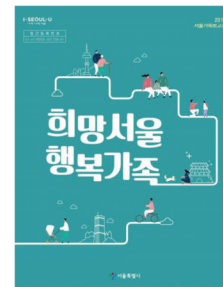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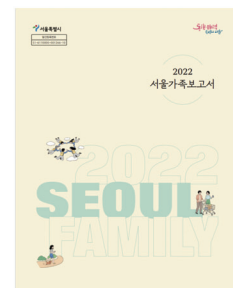
2025 서울가족서베이 주요 결과 및 정책적 함의

2025 서울가족서베이 연구진

책임연구원 | 이재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손서희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보조연구원 | 김민식, 유혜민, 이민지, 이진영, 조수진

서울가족보고서
since 2015

서울가족서베이
Since 2018



| 서울시 가족정책과 서울가족서베이



3

| 2025 서울가족서베이 개요

- **조사대상** 20-64세(1961-2005년생) 서울시 거주자
- **조사기간** 2025. 6. 20. ~ 6. 29. (서울대학교 IRB 승인)
- **표본크기** 1,667명
- **표집방법** 인구비례 할당표집 (성별 X 연령별 X 거주권역별)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5. 4. 기준
 - 20대 340명, 30대 369명, 40대 359명, 50대 이상 599명
- **조사방법** 온라인 패널 활용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업체**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 표집방법, 조사방법, 조사업체는 2018년부터 동일

2025 서울가족보고서 구성요소

도입

- 2025 서울가족서베이 주요 결과
- 2025 서울가족서베이 개요

부록

- 2025 서울가족 현황
- 2015-2024 서울가족보고서
- 서울지역 가족센터 현황

본문: 2025 서울가족서베이

- 결과 요약 및 그래프
- [2025 서울가족 클로즈업]
- [2025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 [2025 서울가족정책]
- [해외 사례]

2025 서울가족보고서 본문 목차

1장 가족 응원

1. 가족친화 도시 서울
2. 탄생응원 도시 서울
3.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4. 효과적인 가족교육

2장 일상 응원

1. 주거 생활
2. 미디어 생활
3. 가족시간과 웰빙
4. 일-생활, 일-가족 균형

3장 설렘 응원

1. 설렘으로 만남
2. 비혼이라는 선택
3. 결혼이라는 선택
4. 부부로 살아감

4장 부모 응원

1. 부모라는 선택
2. 부모됨과 부모역할에 대한 생각들
3. 부모로 살아감
4. 다자녀 부모라는 선택

5장 서로돌봄 응원

1. 성인 자녀와 부모, 형제자매 관계
2. 성인 자녀 지원 및 상속
3. 부모 돌봄

총 300+ 페이지 (HWP 파일 기준)

2023 서울가족서베이 돌아보기 - 2023 서울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

부모됨 의향 vs. 추가 출산의향 관련 요인

- (자녀가 없는 이들이) 부모가 될 의향
 - 경제적 요인: 소득, 향후 안정된 직장을 가질 가능성
 - 가치관 요인: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 긍정적 자녀관, 부정적 자녀관 등
- (자녀가 하나 있는 부모의) 추가 출산의향
 - 엄마: 부모로서의 행복감, 도구적 자녀관
 - 상용직 아빠: 육아휴직 이용경험, 부부관계 행복도

★ 부모가 된 이후의 긍정적 경험이 중요

- 경제적 요인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음

★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첫 자녀' 출생 지원과 '둘째 자녀 이상' 출생 지원 구분할 필요

-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지원은 양육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자가 존중 받는 사회환경 및 문화를 구성하는 등 긍정적인 양육경험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

최신뉴스 정치 북한 경제 마켓+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건강 연예 스포츠

최신뉴스

합계출산율 0.59명... "첫자녀·둘째이상' 출생지원책 다르게"

송고 2023-10-13 18:27

최윤선 기자 + 구독

서울시, 저출생 대응-가족정책 심포지엄-"수요 맞게 정책 보완"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3140200004?input=1195m

2024 서울가족서베이 돌아보기 - 2024 서울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



| 하이라이트

성별 차이

- 부모가 될 의향, 부모가 되지 않으려는 이유: 성별 차이 두드러져
- 부모가 되려는 이유, 부모가 된 이유: 성별로 유사한 양상
- 부모됨 및 자녀양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개인생활 중요시: 특히 여성
- 배경: 부모역할에서 전통적 성역할 분담 지속
 - + '완벽한' 어머니역할 기대(intensive mothering ideology; Hays, 1996)
- 현실적 기대: '이만하면 괜찮은(good enough)' 엄마, 아빠(Bettelheim, 1967)

| 하이라이트

수렴되는 시민 의견

- 아동돌봄은 부모와 국가 공동의 책임
- (파격적) 현금 지원보다 공공 돌봄서비스 필요
- 친인척 돌봄 지원, 민간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보다 공공 돌봄서비스 필요
- 청년 지원 vs. 양육자 지원: 비슷하게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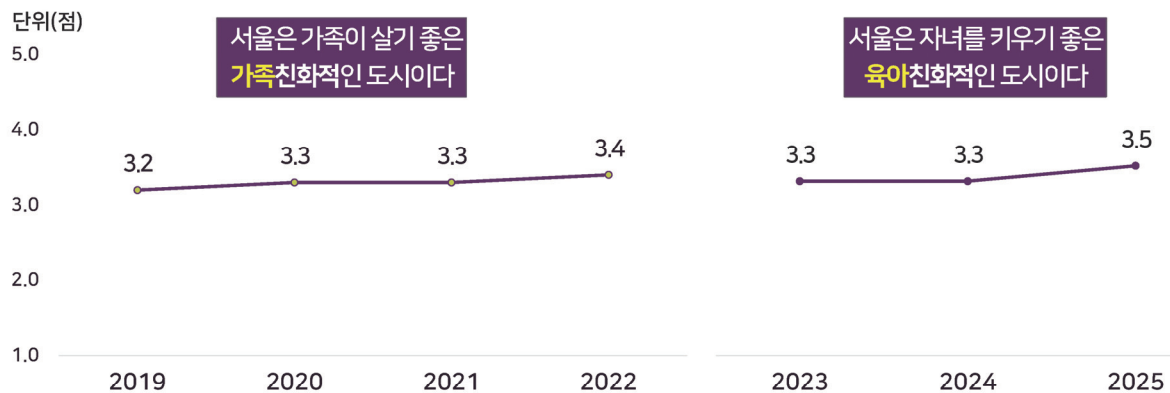
2025 서울가족보고서 무엇이 새로운가?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연계
 - 주거 및 지역사회, 워라벨, 만남(설렘) 강화
 -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 선택과 집중 분야
- 가족 변화 및 트렌드 반영
 - 가족 관련 영상 콘텐츠, 비혼-동거-부모됨, 정자기증 출산, 부부가 되는 시점, 부부개별화 등
 - 성인자녀-부모 양방향 지원 및 돌봄, 상속, 부모 돌봄, 셀프 효도 등
- 가족센터를 위한 구체적 함의
 - 가족사업의 주제 및 방법 관련 구체성, 가족교육 심층 문항

탄생 응원

서울의 육아친화도 (2019-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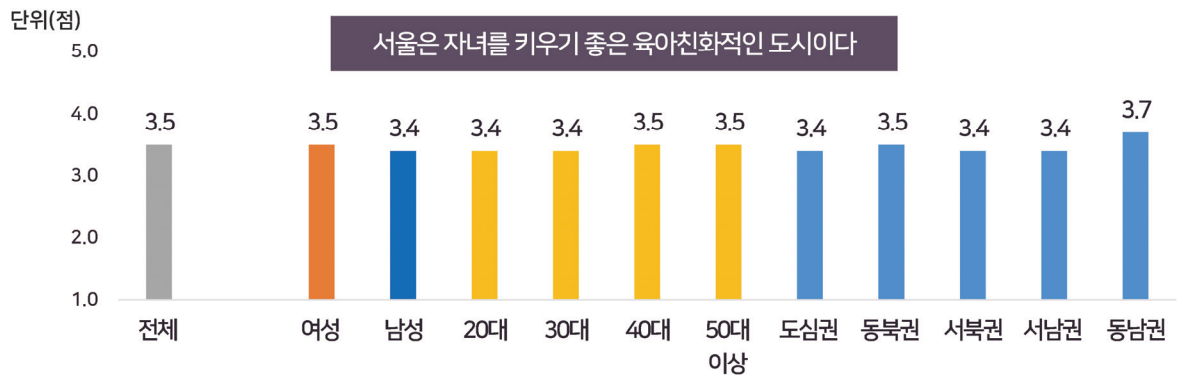
- 2025년 평균 3.5점 (2023년, 2024년의 평균 3.3점보다 소폭 상승)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연도 전체 응답자
(2019년 1,600명, 2020년 1,940명, 2021년 1,637명, 2022년 1,703명, 2023년 1,584명, 2024년 1,574명, 2025년 1,667명)

서울의 육아친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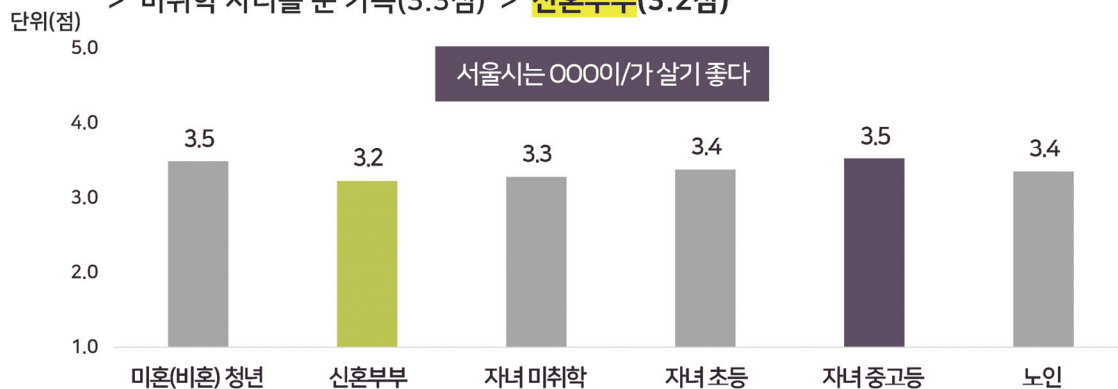
- 연령대별: 40대(3.5점), 50대 이상(3.5점) > 30대(3.4점)
- 권역별: 동남권(3.7점)이 타 권역에 비해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서울은 어떤 시기의 가족에게 살기 좋은가?

-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평균 3.5점) > 미혼(비혼) 청년(3.5점)
- >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3.4점) > 노인(3.4점)
- > 미취학 자녀를 둔 가족(3.3점) > **신혼부부(3.2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요약

서울, 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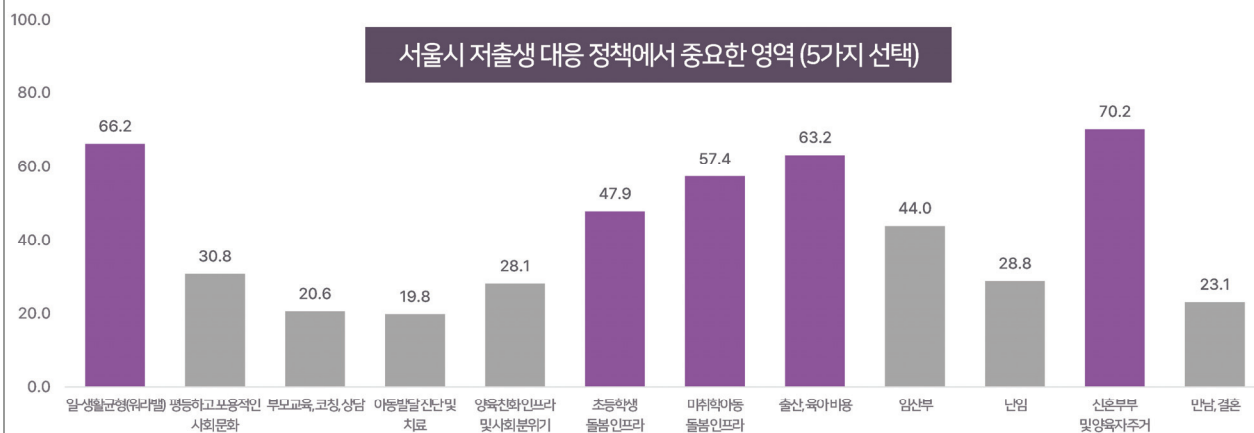
서울시 육아친화도 5점 만점

평균 '24 3.3점 → '25 3.5점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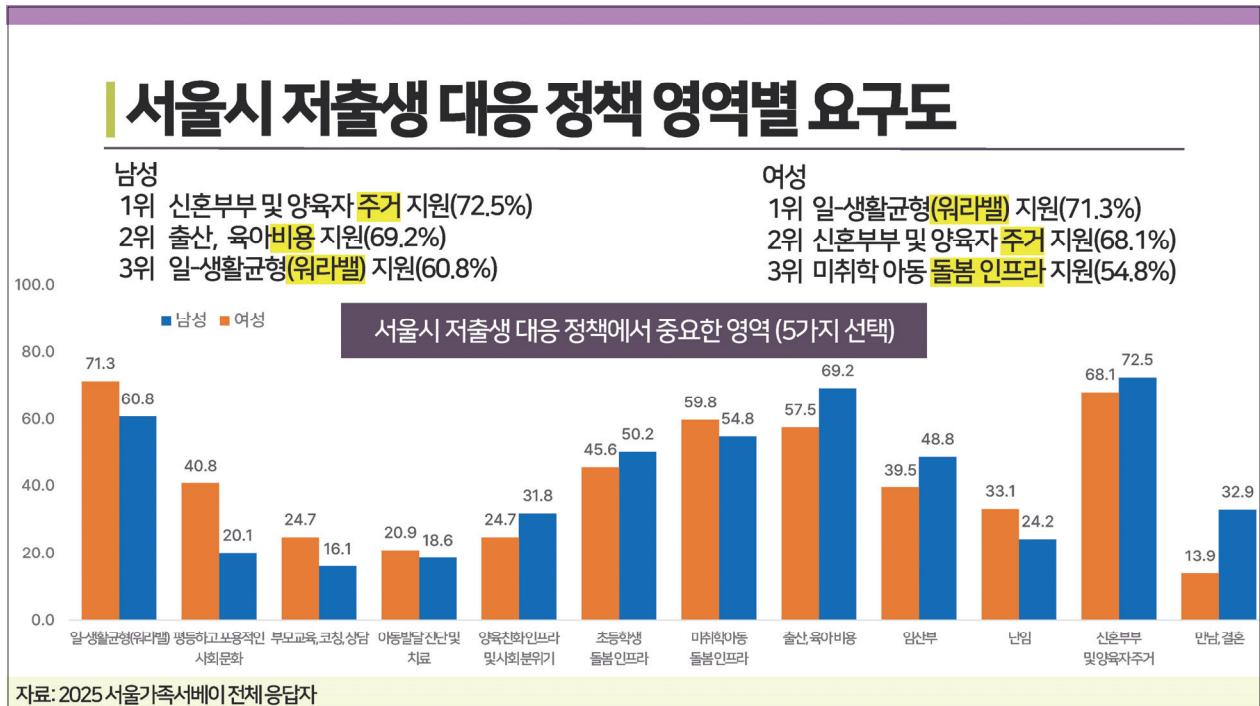
...신혼부부 살기엔 부담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 영역별 요구도

1위 신혼부부 및 양육자 주거 지원(70.2%) > 2위 일-생활균형(워라밸) 지원(66.2%) > 3위 출산, 육아비용 지원(63.2%)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요약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
주거 지원 1위...
남녀가 보는 핵심 달라**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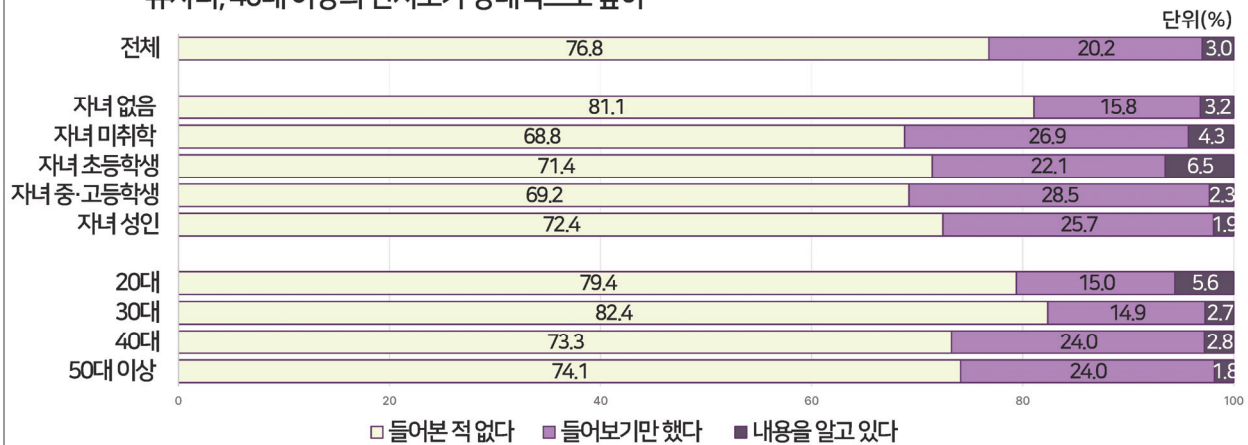
경제적 지원

여성

워라밸·돌봄 인프라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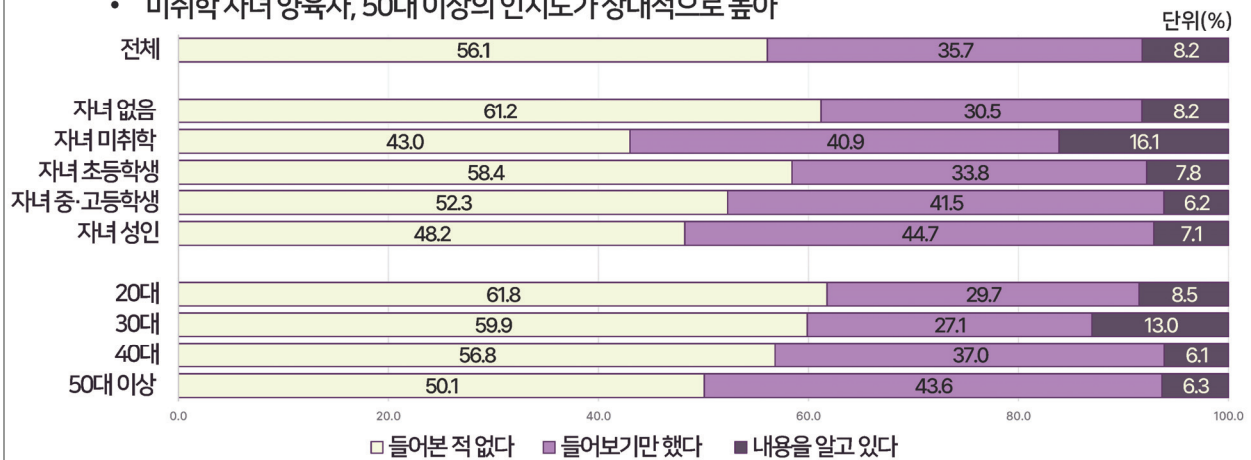
- 20-64세 서울시민 23.2%,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내용 알거나 들어봤다
- 유자녀, 40대 이상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인지도

- 20-64세 서울시민 43.9%, 「미리내집」 내용 알거나 들어봤다
- 미취학 자녀 양육자, 50대 이상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요약

- ‘미리내집’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보다 인지도 높아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인지도
20~30대와 무자녀 상대적으로 낮아
- ‘미리내집’ 인지도
미취학 자녀 부모와 50대 상대적으로 높아

|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 인지도 및 필요도 [클로즈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인지도

- ☑ 여성일 때
- ☑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 ☑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
- ☑ (무자녀 기혼자에 비해)
무자녀 미혼(비혼)자일 때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인지도가 높았음

「미리내집」 인지도

- ☑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
- ☑ 배우자가 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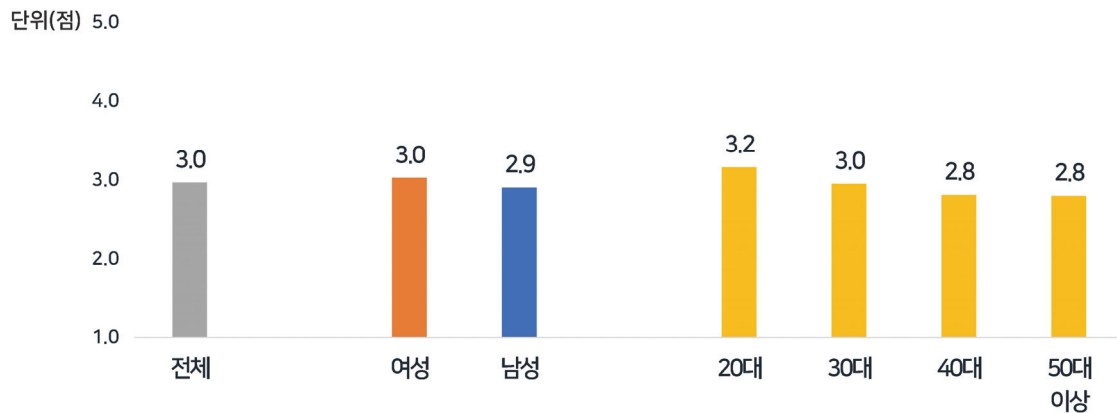
「미리내집」
인지도가 높았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20~40대 응답자 1,068명

일상 응원

|(언젠가) '내 집'을 소유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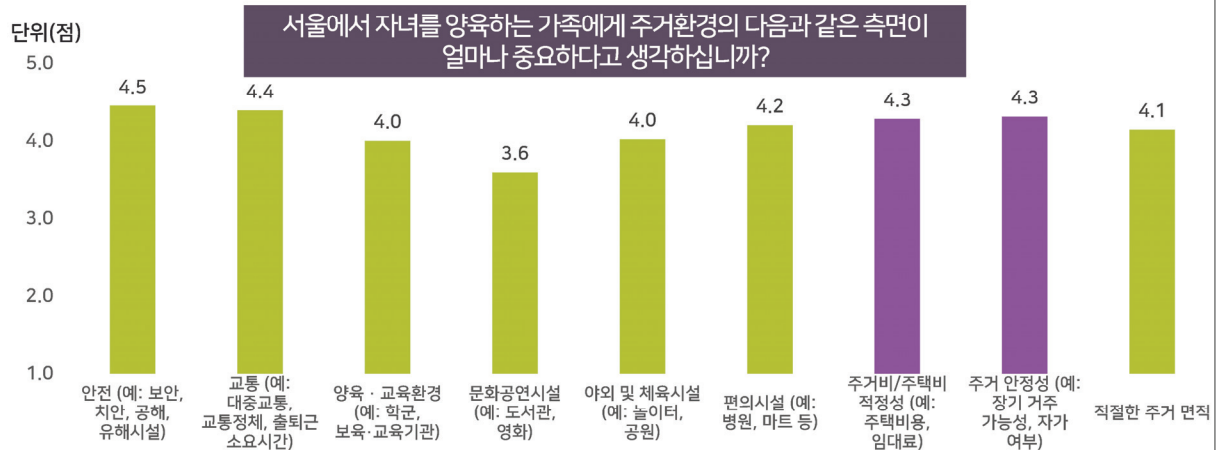
- 주택이 없는 서울시민 (언젠가) '내 집' 소유 가능성 평균 3점 - '보통' 수준
- 20대(3.2점) > 30대(3점), 40대(2.8점), 50대 이상(2.8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본인 혹은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902명)

자녀양육기에 중요한 주거환경

- 안전(4.5점) > 교통(4.4점) > 주거안정성(4.3점), 주거비/주택비 적정성(4.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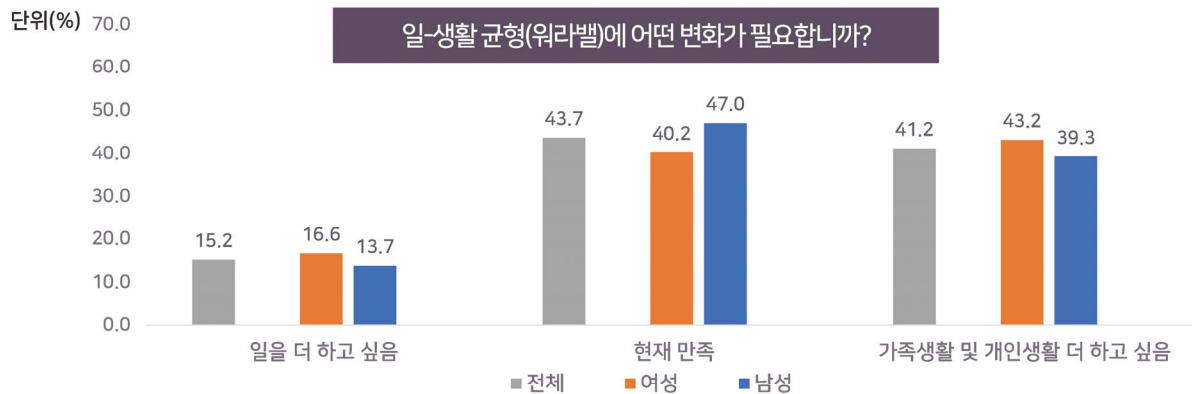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요약

“내 집 마련 가능성? 보통”
... 자녀양육기, 주거 안정·비용이 중요

일-생활 균형(워라밸) 균형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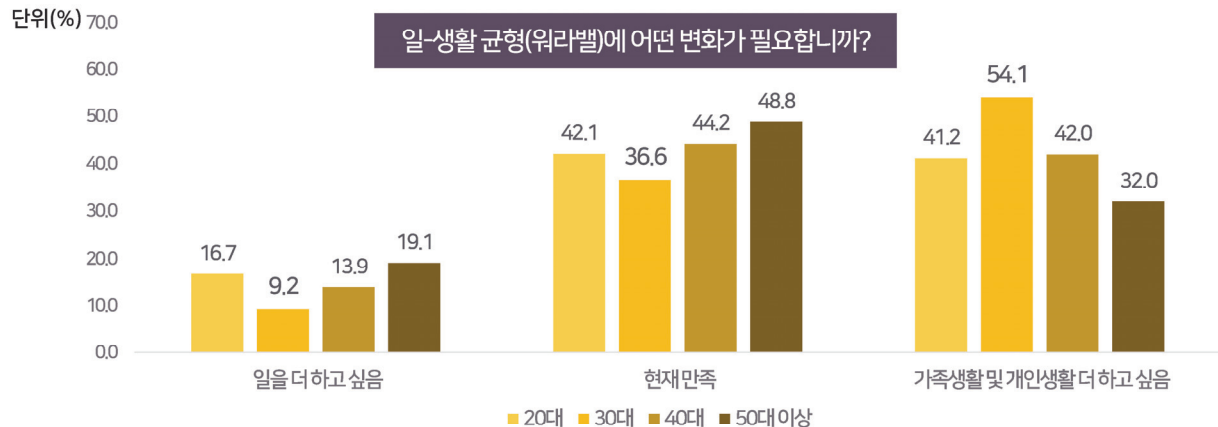
- 일하는 서울시민: '현재 만족'(43.7%) vs. '가족 및 개인생활 더 하고 싶음'(41.2%) 비슷
- '현재 만족', 남성(47%) > 여성(40.2%)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지난 일주일 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근무했거나,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 1,221명)

일-생활 균형(워라밸) 균형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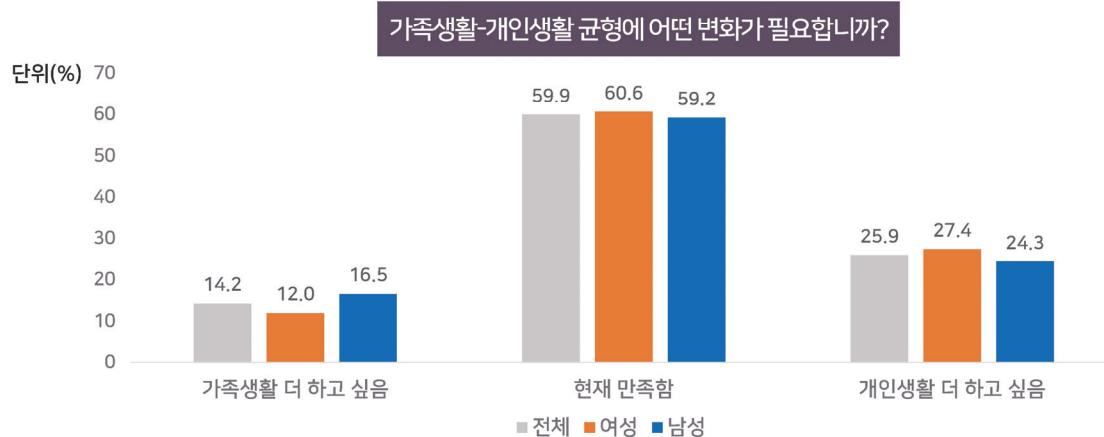
- 30대, 상대적으로 가족생활 및 개인생활 더 하고 싶음(54.1%)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지난 일주일 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근무했거나,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 1,221명)

가족생활 vs. 개인생활 균형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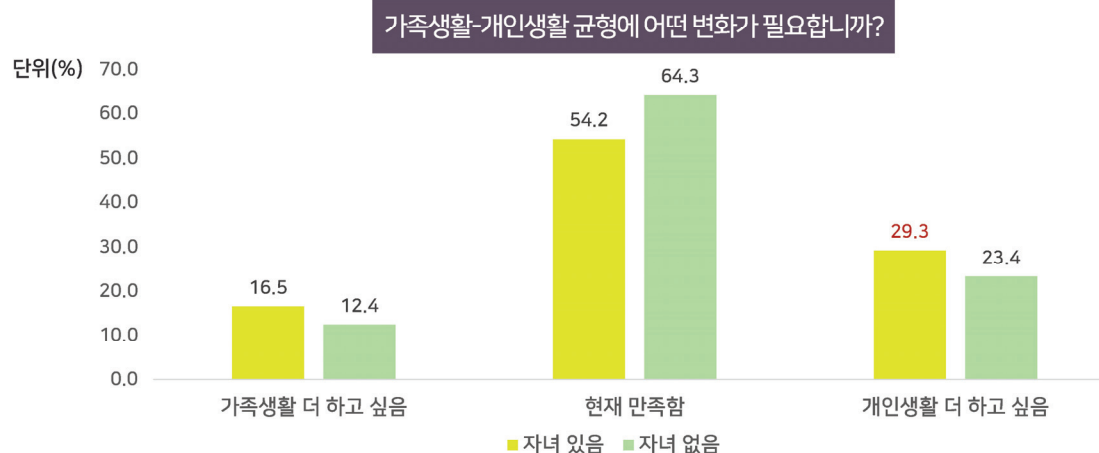
- ‘개인생활 더 하고 싶음’: 여성(27.4%) > 남성(24.3%)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가족생활 vs. 개인생활 균형 상태

- 유자녀: ‘개인생활 더 하고 싶음’(29.3%) > ‘가족생활 더 하고 싶음’(16.5%)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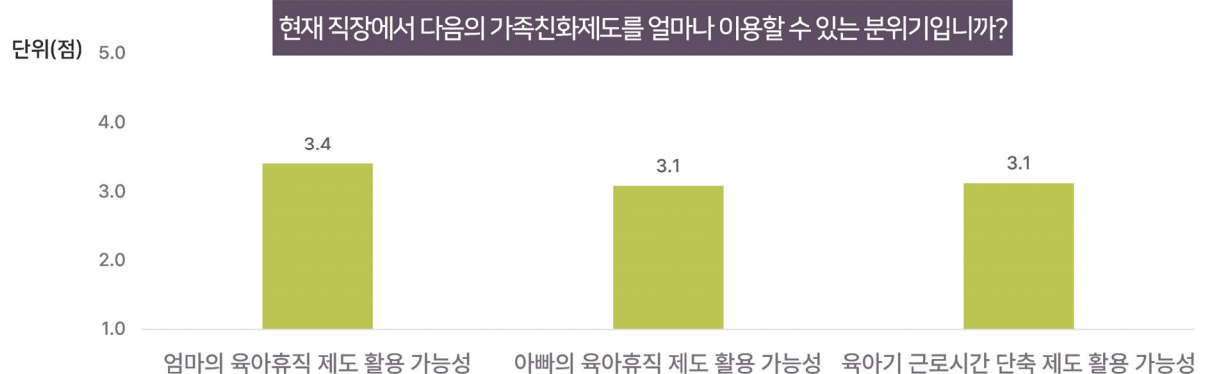


유자녀 집단 개인생활
늘리길 더 원해

양육자 '개인생활'
정책 관심 지속 필요

가족친화 직장 제도 이용 가능성

- '엄마의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3.4점) > '아빠의 육아휴직 제도 활용 가능성'(3.1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가능성'(3.1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아니면서 지난 일주일 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근무하였거나,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 1,1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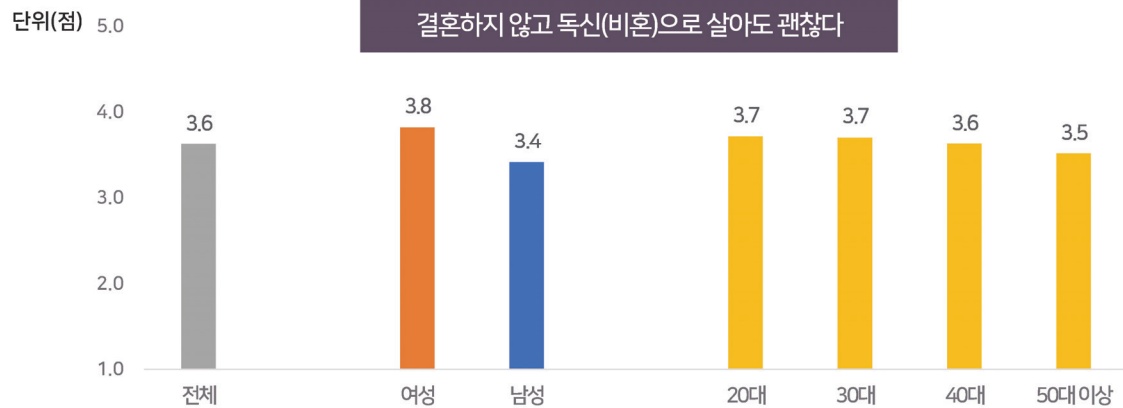
요약

**현재 직장 분위기, 아빠 육아휴직 활용
엄마만큼 쉽지 않아**

설렘 응원

비혼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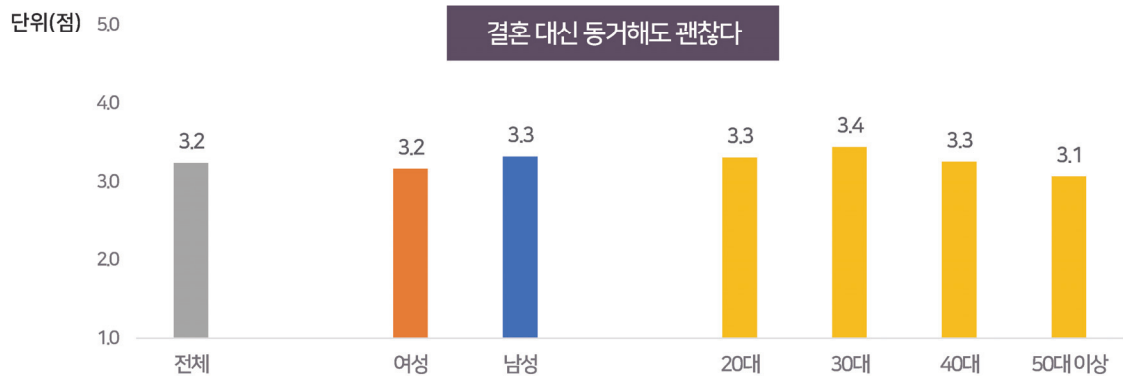
- 20-64세 서울시민 동의 수준 평균 3.6점
- 여성(3.8점) > 남성(3.4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결혼 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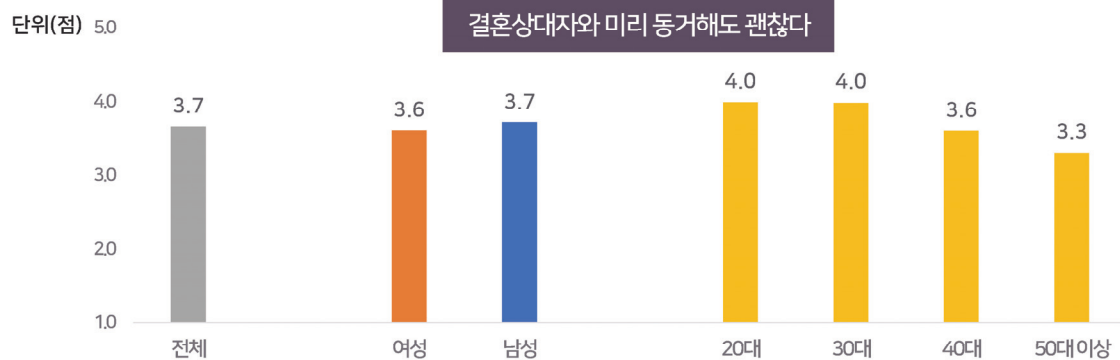
- 20-64세 서울시민 동의 수준 평균 3.2점
- 남성(3.3점) > 여성(3.2점)
- 20대(3.3점), 30대(3.4점), 40대(3.3점) > 50대 이상(3.1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결혼상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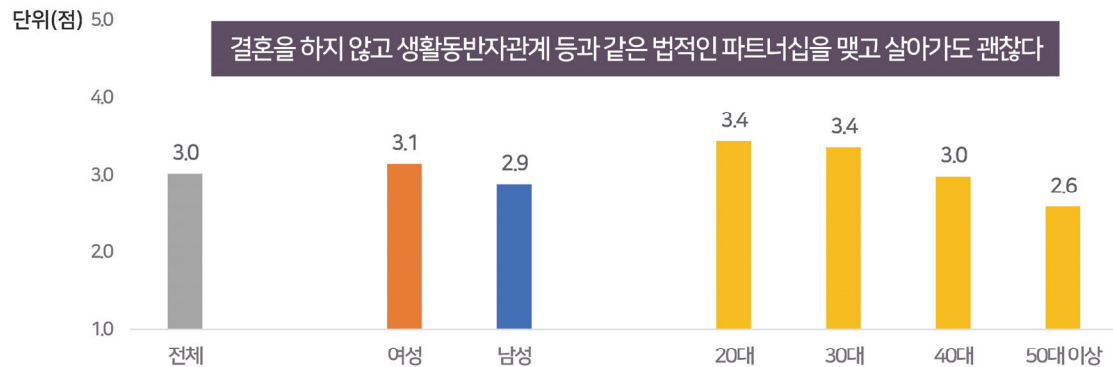
- 20-64세 서울시민 동의 수준 평균 3.7점
- 남성(3.7점) > 여성(3.6점)
- 20대(4점), 30대(4점) > 40대(3.6점) > 50대 이상(3.3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태도

- 20-64세 서울시민 동의 수준 평균 3점
- 여성(3.1점) > 남성(2.9점)
- 20대(3.4점), 30대(3.4점) > 40대(3점) > 50대 이상(2.6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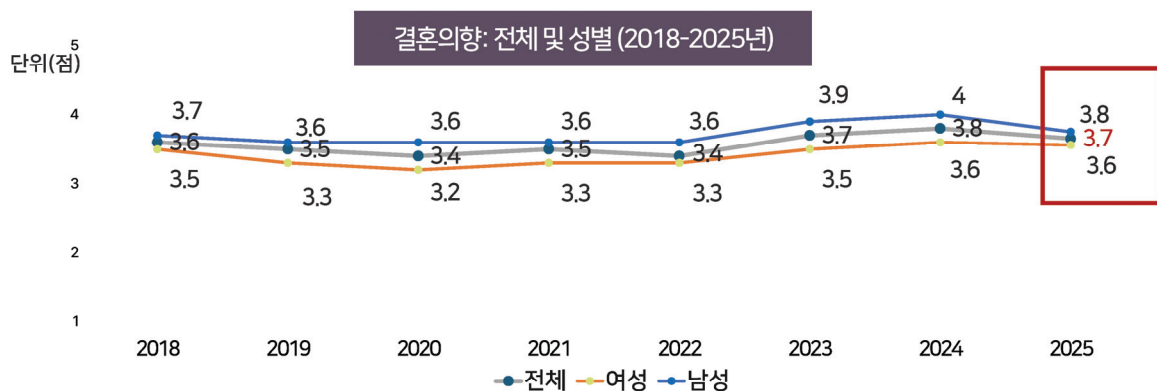
요약

비혼, 비혼동거, 생활동반자관계 수용도 모두 보통 이상

- 자발적 비혼 등 다양한 삶의 양식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필요
- 결혼제도 밖 파트너십에서의 부모됨을 고려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 필요

결혼의향 (2018-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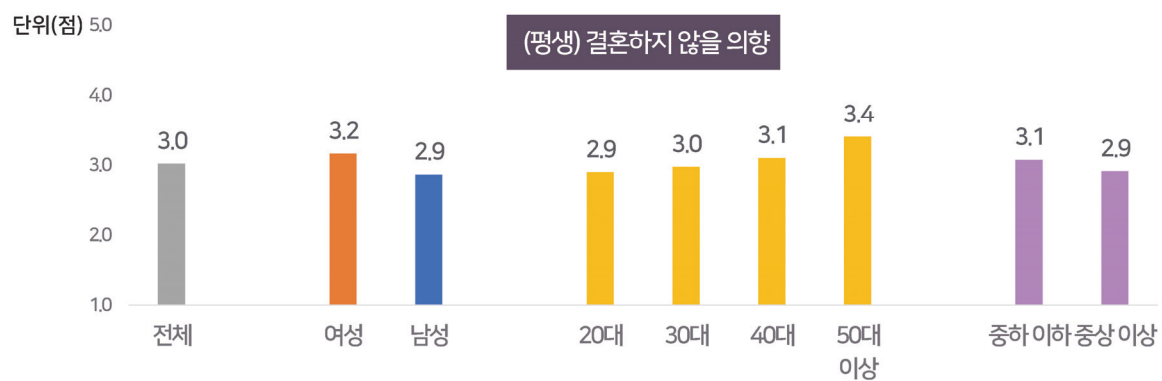
- 2025년 20-39세 비혼(미혼) 평균 3.7점 (2024년 3.8점보다 소폭 하락)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연도(결혼한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39대 응답자 2018년 226명, 2019년 510명, 2020년 664명, 2021년 607명, 2022년 603명, 2023년 555명, 2024년 554명, 2025년 563명)

평생 비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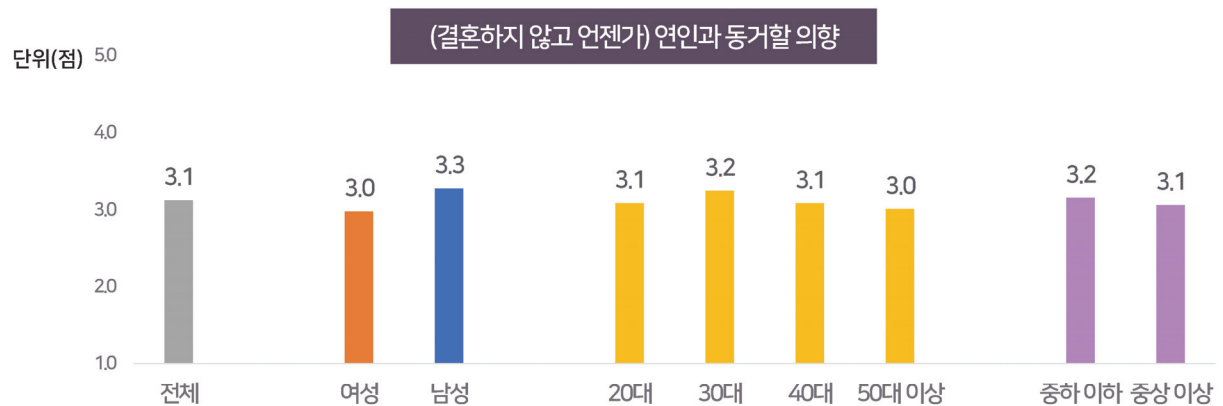
- 20-64세 비혼(미혼) 서울시민 평균 3.0점
- 여성(3.2점) > 남성(2.9점)
- 주관적 계층 중하(3.1점) > 중상 이상(2.9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816명)

비혼동거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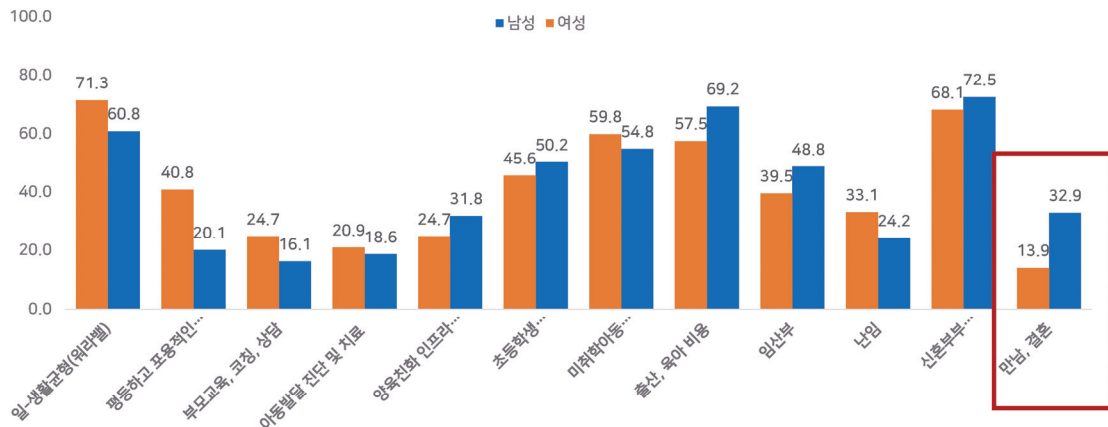
- 20-64세 비혼(미혼) 서울시민 평균 3점
- 남성(3.3점) > 여성(3점)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연인과 동거하지 않는 797명)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 영역별 요구도 [반복]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중요한 영역 (5가지 선택)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요약

평생 결혼하지 않거나,
비혼 동거할 의향 보통 이상
... 남녀 차이 두드러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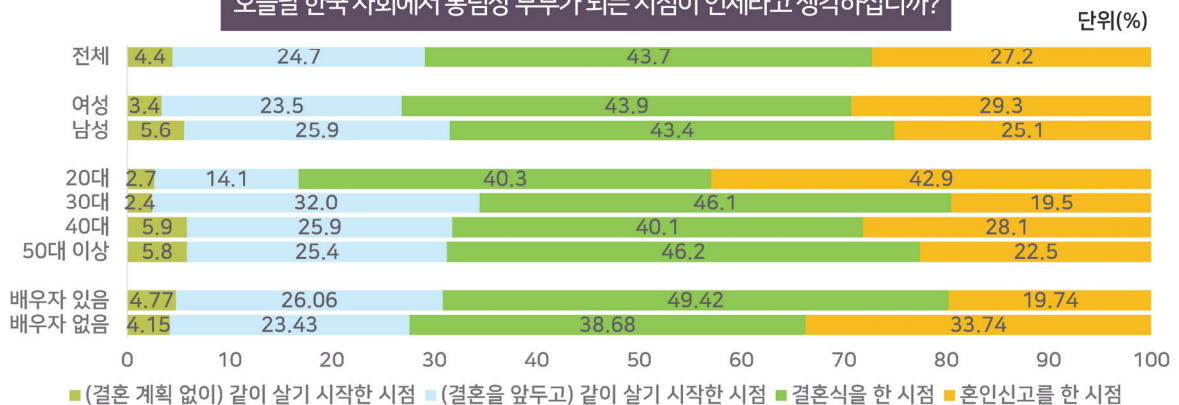
여성 청년, 만남-결혼-출산의 연계를 전제로 한
만남 행사에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일 가능성

→ 만남, 결혼 지원 정책에서 젠더 감수성 필요

부부가 되는 시점

- 1위 결혼식(43.7%) > 2위 혼인신고(27.2%) > 3위 (결혼 앞두고) 동거(24.7%)
- 20대는 혼인신고(42.9%) > 결혼식(40.3%)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통념상 부부가 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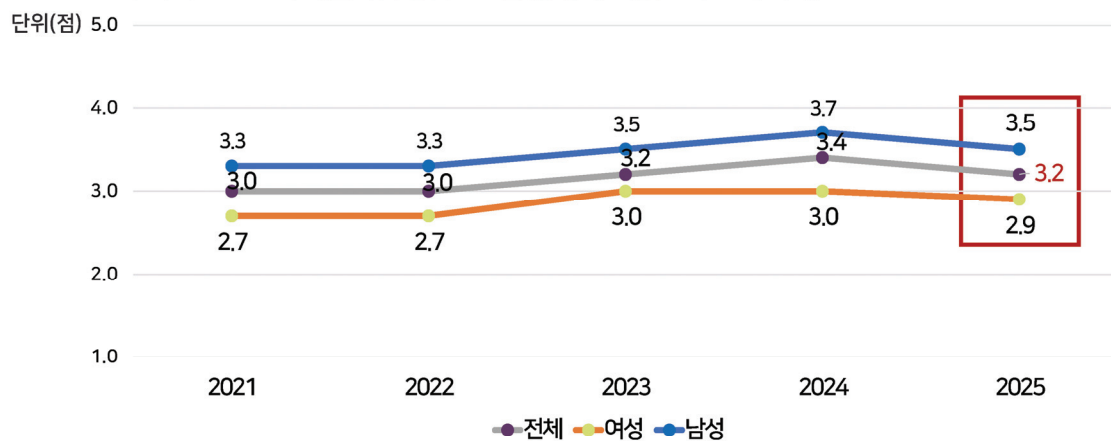
**통념상 부부가 되는 시점,
결혼식 > 혼인신고 > 결혼 앞둔 동거 순**

→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한 부부도
(예비)신혼부부 지원 정책에서 고려할 필요

부모 응원

|(언젠가) 부모가 될 의향 (2021-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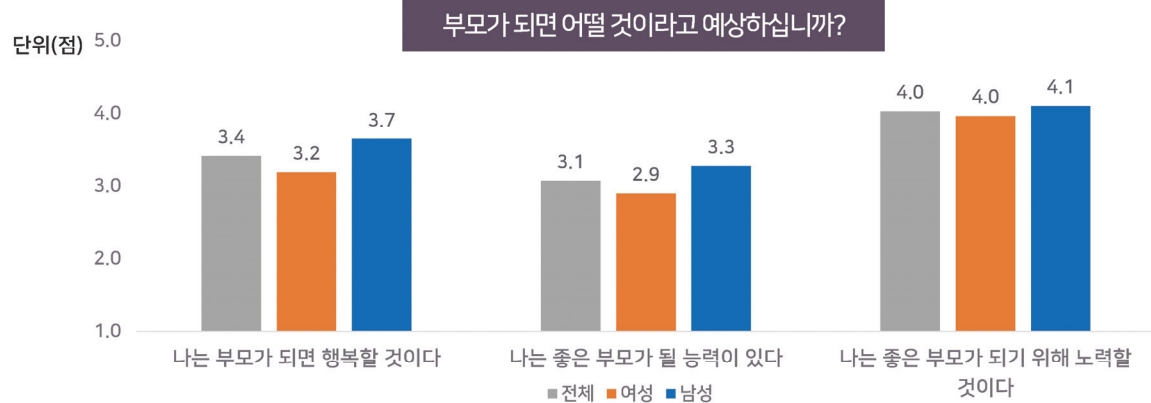
- 무자녀 20-49세 서울시민 평균 3.2점 (상승 추세였으나 소폭 하락)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연도(자녀가 없는 20-49세 응답자; 2021년 794명; 2022년 842명; 2023년 793명; 2024년 776명; 2025년 823명)

내가 부모가 된다면: 긍정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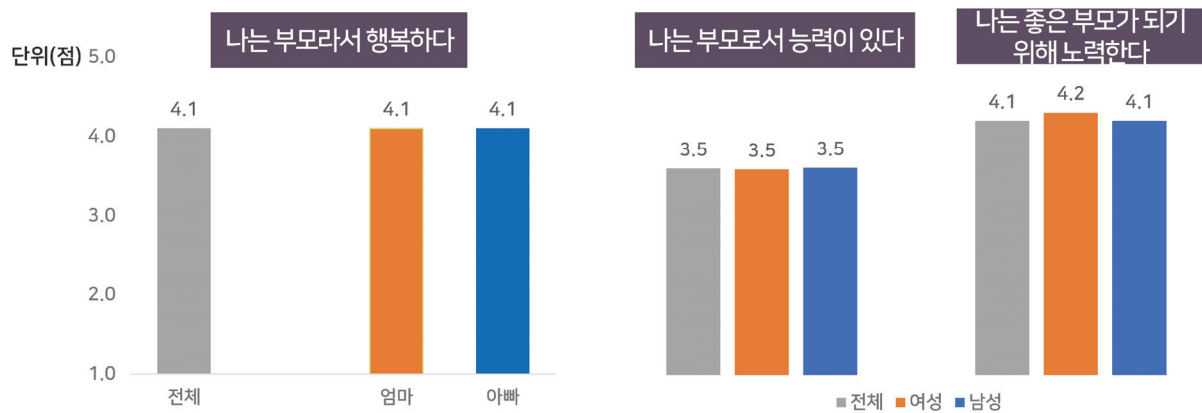
- 무자녀 20-49세 서울시민
'부모가 되면 행복할 것' 3.4점, '좋은 부모 될 능력 있다' 3.1점, '좋은 부모 되기 위해 노력할 것' 4점
- 남성 > 여성



자료: 2025 서울가족조사(자녀가 없는 20-49세 여성 437명, 남성 386명)

부모로서 나는: 긍정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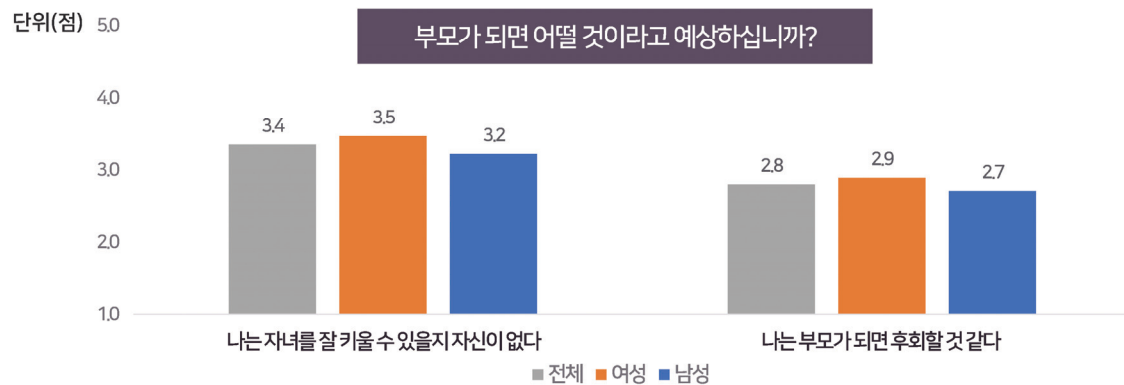
- 유자녀 서울시민 '부모로서 능력 있다' 3.5점, '좋은 부모 되기 위해 노력한다' 4.1점
- 엄마와 아빠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자료: 2025 서울가족조사(자녀가 있는 응답자 721명)

내가 부모가 된다면: 부정적 전망

- 무자녀 20-49세 서울시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3.4점, ‘부모가 되면 후회할 것 같다’ 2.8점
- 여성 > 남성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없는 20-49세 여성 437명, 남성 386명)

요약

무자녀 시민 “좋은 부모 되기 위해 노력할 것”, “부모 되면 행복할 것”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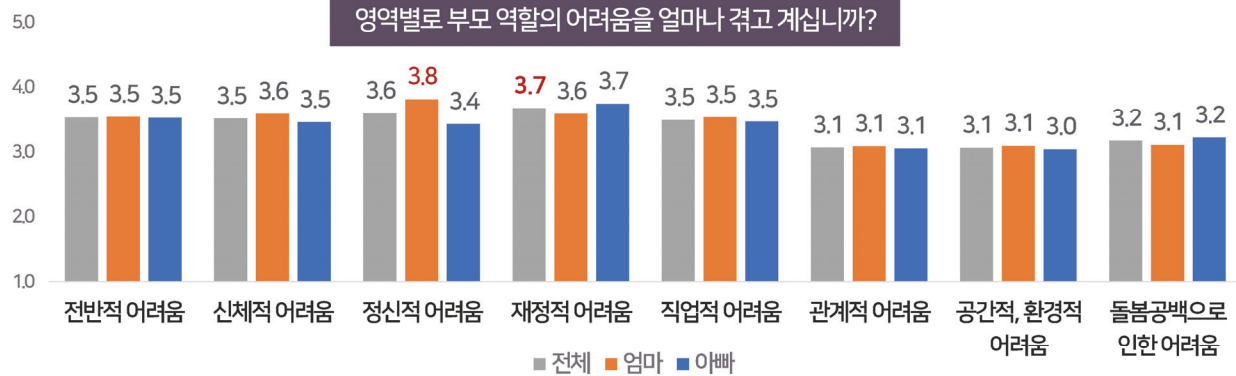
하지만 “기대만큼 잘 키울 자신 없음” 우려 커

→ 부모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설정 지원 필요

부모역할의 영역별 어려움

-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시민 '부모역할의 전반적 어려움' 평균 3.5점
- '재정적 어려움'(3.7점)이 1위
- '정신적 어려움' 엄마(3.8점) > 아빠(3.4점)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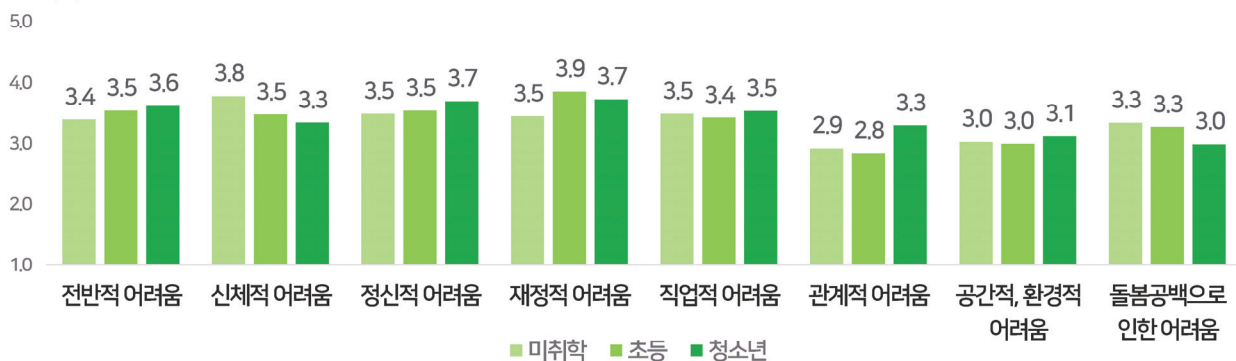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엄마 129명, 아빠 171명)

부모역할의 영역별 어려움

- 미취학 자녀 부모: '신체적'(3.5점), '돌봄공백'(3.3점)
- 초등 자녀 부모: '재정적'(3.9점) 어려움
- 청소년 자녀 부모: '재정적'(3.7점), '관계적'(3.3점) 어려움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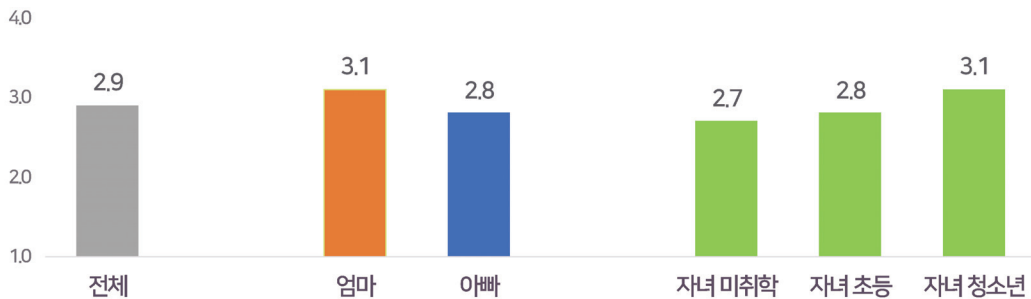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엄마 129명, 아빠 171명)

양육스트레스

-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시민 평균 2.9점
- 엄마(3.1점) > 아빠(2.8점)
- 청소년 자녀 부모(3.1점) > 초등학생 자녀 부모(2.8점), 미취학 자녀 부모(2.7점)

단위(점)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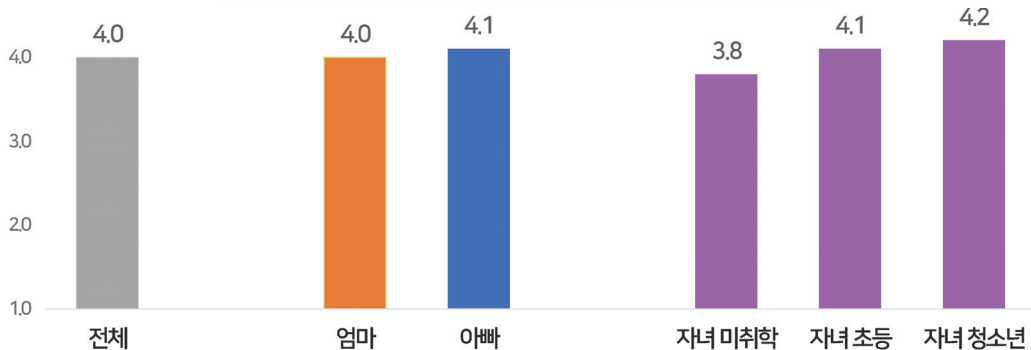
자료: 2025서울가족서베이(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엄마 129명, 아빠 171명)

자녀가 실패하지 않는 것은 중요?

-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시민 평균 4점
- 청소년 자녀 부모(4.2점), 초등 자녀 부모(4.1점) > 미취학 자녀 부모(3.8점)

단위(점) 5.0

자녀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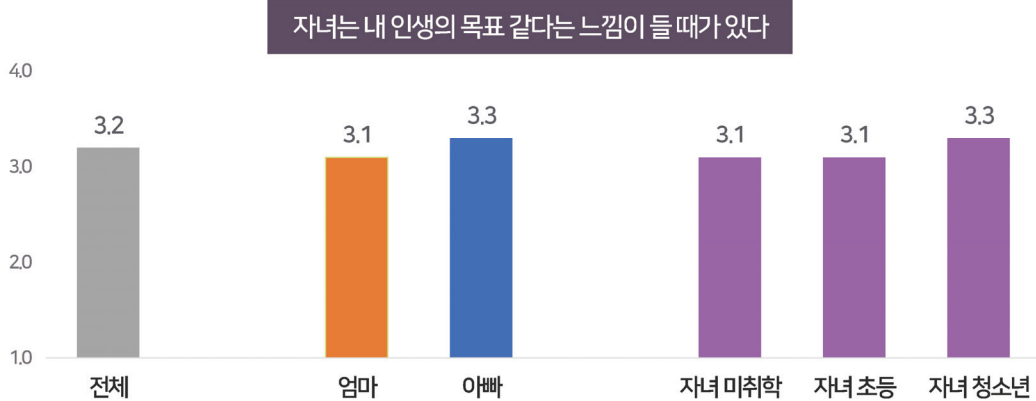


자료: 2025서울가족서베이(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엄마 129명, 아빠 171명)

자녀는 인생의 목표?

-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시민 평균 3.2점

단위(점) 5.0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엄마 129명, 아빠 171명)

요약

미취학 자녀 부모
신체적 어려움

초등·청소년
자녀 부모
경제적 어려움

청소년 자녀 부모
관계적 어려움.
자녀 실패 두려워하며,
때로 자녀가 인생의
목표처럼 느껴

“부모의 부담을 목격하면서 성장한 자녀,
부모의 과도한 개입과 통제를 경험한 자녀가
미래에 부모가 되고자 할 것인가?”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요인은? [클로즈업]

- ☒ 어머니일 때
- ☒ 자녀를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할수록
- ☒ 본인 부모가 헬리콥터 부모역할¹을 했다고 생각할수록
- ☒ 집중적 부모역할²에 동의할수록
- ☒ 자녀의 발달단계 및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수록
- ☒ 부부관계 행복도가 낮을수록
- ☒ 부모의 돌봄 및 가사 도움을 받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경험하였음

¹헬리콥터 부모역할: 자녀 발달단계에 적합하지 않게 부모가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자녀를 통제하는 태도(이재림, 2022)

²집중적 부모역할: 부모가 감정, 시간, 에너지, 경제적 자원을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믿는 양육 이데올로기(Hays, 1996)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18세 이하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며 본인 부모 및 배우자 부모가 각각 1명 이상 생존한 응답자 290명)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됨 의향과 관련 있을까? [클로즈업]

- ☒ 남성일 때
- ☒ 연령이 낮을수록
- ☒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때
- ☒ 부모와 친밀감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부모-자녀관계가 양분이 됨)
- ☒ 부모가 '자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가족의 가치체계 세대 간 전수)



부모됨
의향이
더 있었음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없고, 부모가 한 명 이상 생존한 895명)

요약

부모와의 긍정적인 경험 축적, 가족의 긍정적 분위기 경험 등
가족체계 전체에 관심을 두는 저출생 대응 정책 필요

→ “탄생지원”, “육아지원”에 그치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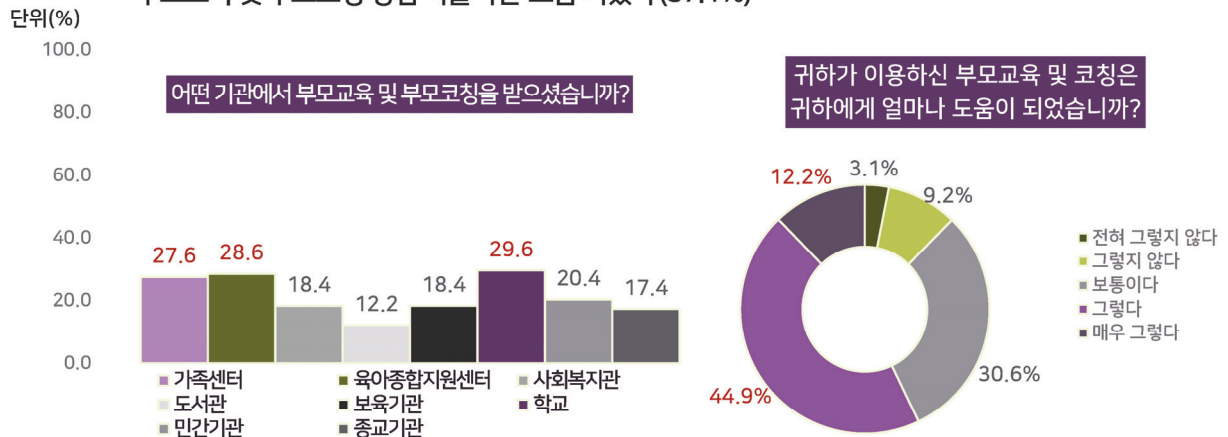
“가족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저출생 대응 정책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가족센터의 교육, 상담, 문화·여가
사업이 실제로는 저출생 현상 완화의 해법이 될 수 있어”

가족 지원

부모교육 및 부모코칭: 이용 경험,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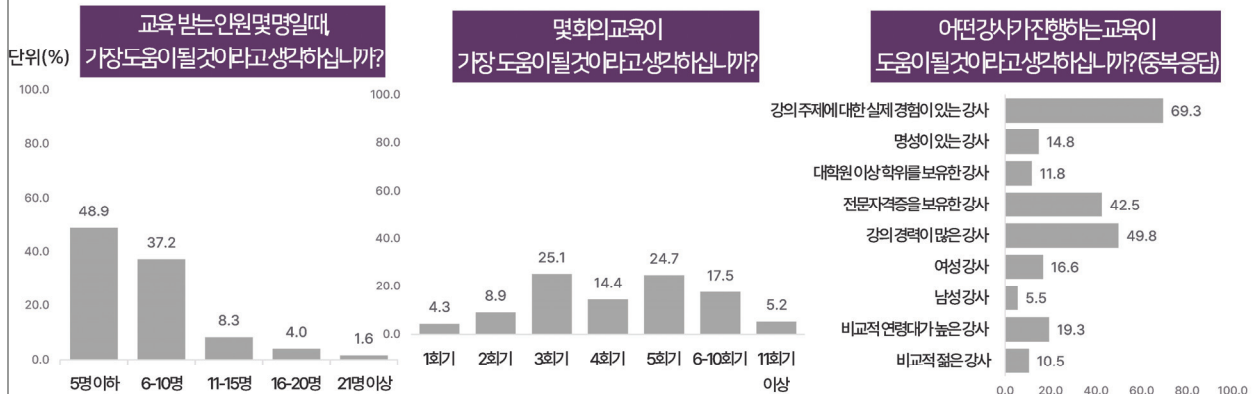
- 부모교육 및 부모코칭을 이용한 기관: 학교(29.6%), 육아종합지원센터(28.6%), 가족센터(27.6%)
- 부모교육 및 부모코칭 경험 서울시민 '도움 되었다'(57.1%)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부모교육, 부모코칭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98명)

효과적인 가족교육 방법: 참가인원, 회기수, 강사 특성

- 참가인원: 5명 이하(48.9%) > 6-10명(37.2%) > 11-15명(8.3%)
- 회기 수: 3회기(25.1%) > 5회기(24.7%) > 6-10회기(17.5%)
- 강사: 강의 주제에 대한 경험 있음(69.3%) > 강의 경력 많음(49.8%) > 전문자격증 보유(42.5%)



자료: 2025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요약

부모교육·코칭 경험자 절반 이상 “실제 도움”
주로 학교·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소집단, 다회기, 경험 많은 강사일 때
가족교육 효과적일 것이라 여겨

감사합니다

[세션1] 주제발표
“서울시 저출생 정책 방향과 쟁점”

탄생 응원

서울시 (예비)양육자 실태와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

최지은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단장

※ 이 발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중간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발간되는 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 (예비)양육자 실태와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

최지은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단장

※ 이 발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중간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발간되는 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세션1] 주제발표
“서울시 저출생 정책 방향과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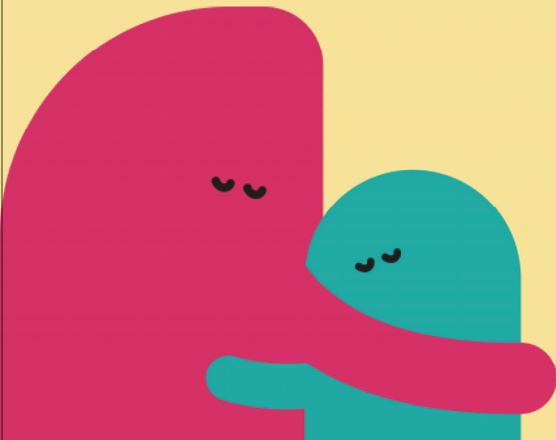
일생활균형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성과 및 발전 방안

최현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책임연구원

2025
서울가족정책 공동 심포지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성과 및 발전 방안



• **최현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책임연구원

*본 발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현재 진행중인 연구의 일부 내용입니다.
최현희·민지선 (2025 발간예정),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평가 및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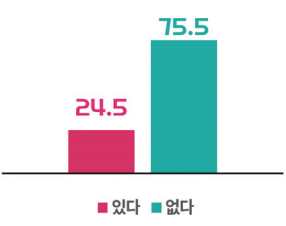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추진 배경


02

일-생활 균형 어려움

- 맞벌이 부모, 육아휴직·노동시간 단축 활용 현실적 제약
- 장시간 노동으로 출퇴근 전후 돌봄 공백 발생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경험(%)
(서울시 유자녀 근로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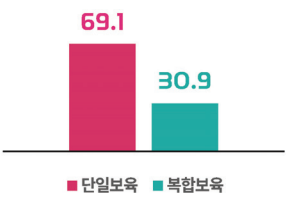
■ 있다 ■ 없다

출처: 서울시 일생활균형 실태 조사(2024)

보완적 돌봄 지원 필요

- 어린이집 등 공적 돌봄기관 주요 활용
- 복합적 돌봄 이용 가구 비중 약 30%

서울시 영유아 단일/복합 보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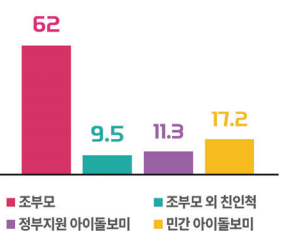
■ 단일보육 ■ 복합보육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

여전한 조부모 돌봄 실태

- 양육공백과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부모 돌봄 약 62%
-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여 조부모 지원 필요성 대두

부모 외 자녀 돌봄 형태(%)



■ 조부모 ■ 조부모 외 친인척
■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 민간 아이돌보미

출처: 서울시 양육자 생활 실태 조사(2024)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개요

03

사업내용

친인척형

4촌 이내 친인척이 자신의 손자녀(또는 조카 등)에게 돌봄 수행 시 수당 지원

민간 서비스형

(친인척이 돌봄 역할 수행 어려운 경우 등 부모 선택권 확대를 위한) 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 만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지원범위

- 가정 당 영아 3명.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 (연령 초과 전까지)

지원조건

- 친인척 조력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인정시간 하루 4시간 상한)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월 20시간 이상 돌봄서비스 이용 시

지원대상

- 영아 1명 월 30만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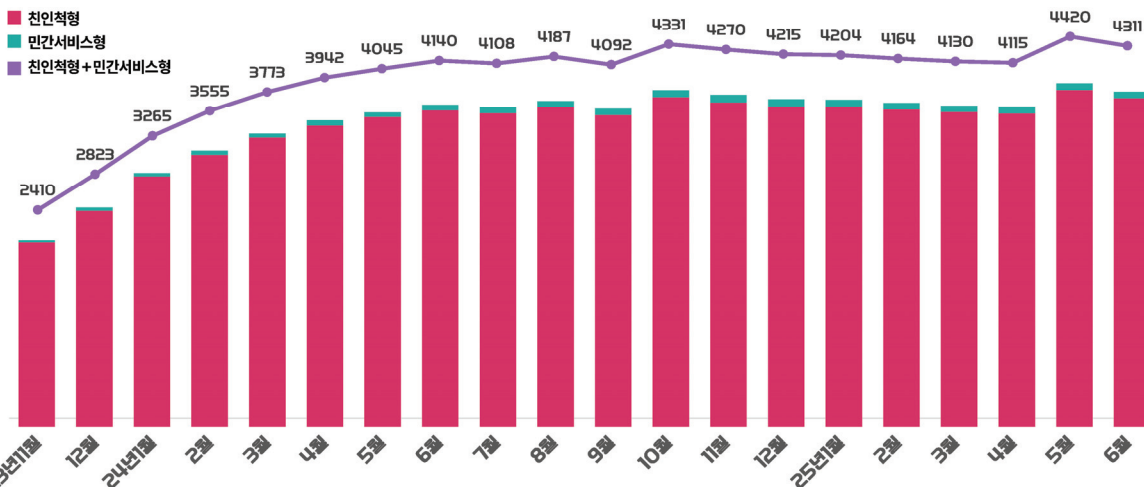
중복금지

- 정부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자치구 손주 돌보미 사업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 금지
- 어린이집 이용시간대(9시~16시)와 돌봄시간 중복 불가

지원 유형별 운영 현황

04

2025년 상반기 약 4,300가구 내외 지급하며 목표 가구 초과 달성하며 안정화되었으나, 친인척형 사업이 98%를 차지하여 민간서비스형 사업 이용은 약 2%로 저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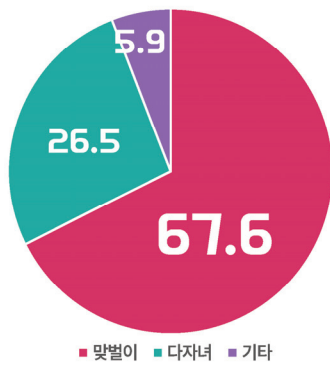


가구 유형별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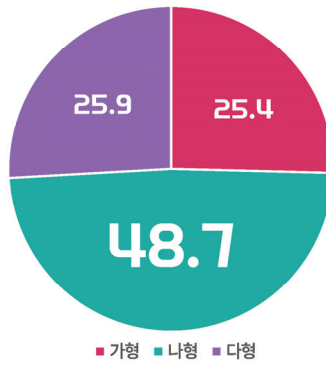
05

이용 가구 중 맞벌이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대부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본 사업을 보완적으로 틈새 돌봄을 메우기 위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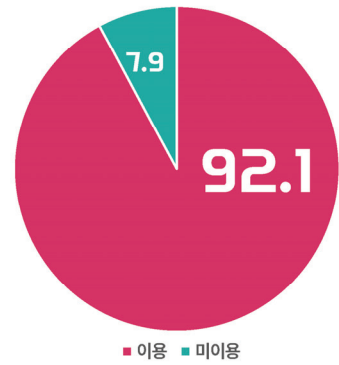
양육공백 유형



중위소득기준



어린이집 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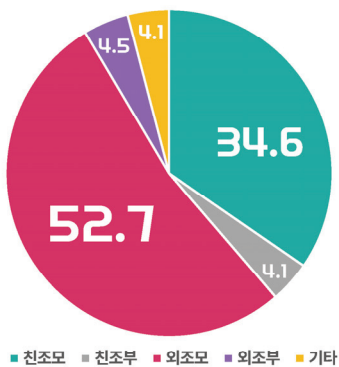
- 1) 양육공백 유형은 사업 신청 시 중복 선택이 불가하여 맞벌이이면서 다자녀인 경우와 같이 중복되는 사례의 경우 신청자가 선택한 단일 기준에 따라 분류됨
2) 중위소득기준: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친인척 조력자 유형별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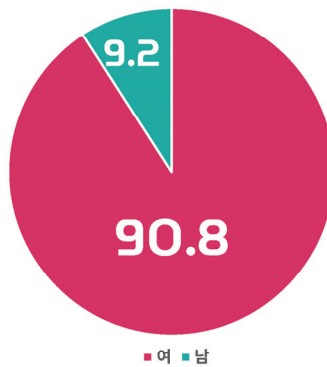
06

조모 비중 87.3%로 60대 여성 조부모가 돌봄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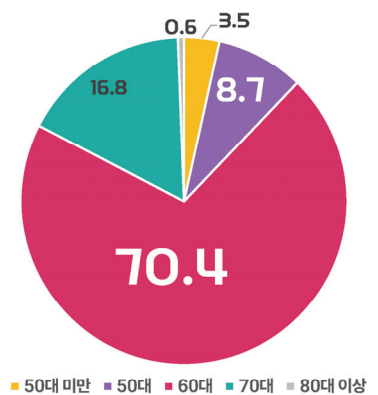
아동과의 관계



성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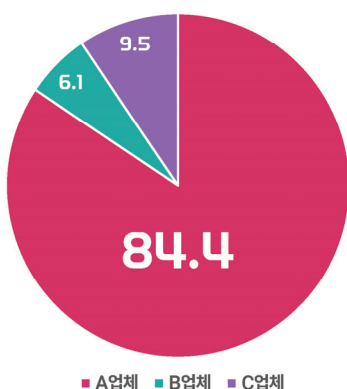


민간서비스형 업체 및 돌봄시간별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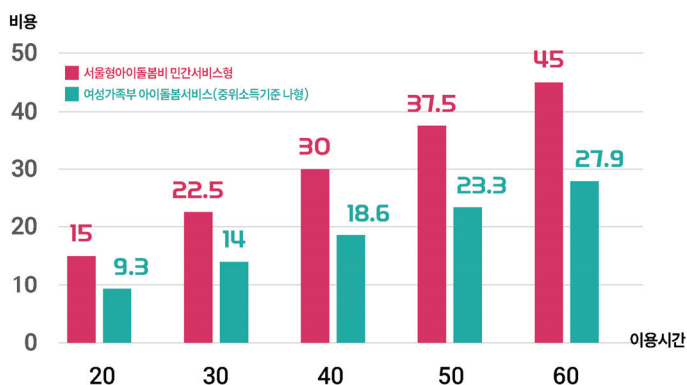
07

앱 이용 편리성 및 육아도우미 보유 규모 차이 등에 따른 특정 서비스 공급업체 편중 현상이 나타났으며, 민간서비스 사업 이용 저조 이유로는 높은 자기부담금이 꼽힘

서비스 공급기관(업체)



서비스 이용 시 자기부담금 (단위: 만원)



조력자 역량 강화 및 지원

08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력자 온라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2025년 공모전 및 힐링데이 운영을 통해 돌봄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도모함

조력자 온라인 교육

- 1 기본교육 : 사업 이해 증진
- 2 돌봄교육 : 돌봄 역량 강화



만 2세 발달
및 지도법



편견, 차별,
학대 예방



일상생활 및
등하원 지도



영유아
질병 및 대처법



영유아 놀이
및 상호작용



양육자와의 소통
(양육갈등예방)

공모전 및 조력자 힐링데이 운영

- 1 소중한 돌봄 순간 사진 공모전



동이들과 함께 커져가는
할머니의 행복



- 2 조력자 문화체험 휴식 제공

민간서비스 업체 운영 관리

09

민간서비스 공급기관 공모 및 심사 관리체계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고자 함

2023년

민간기관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서울연구원)

2024년

공급기관 공모 및 심사(1차)

2025년

공급기관 공모 및 심사(2차)

민간기관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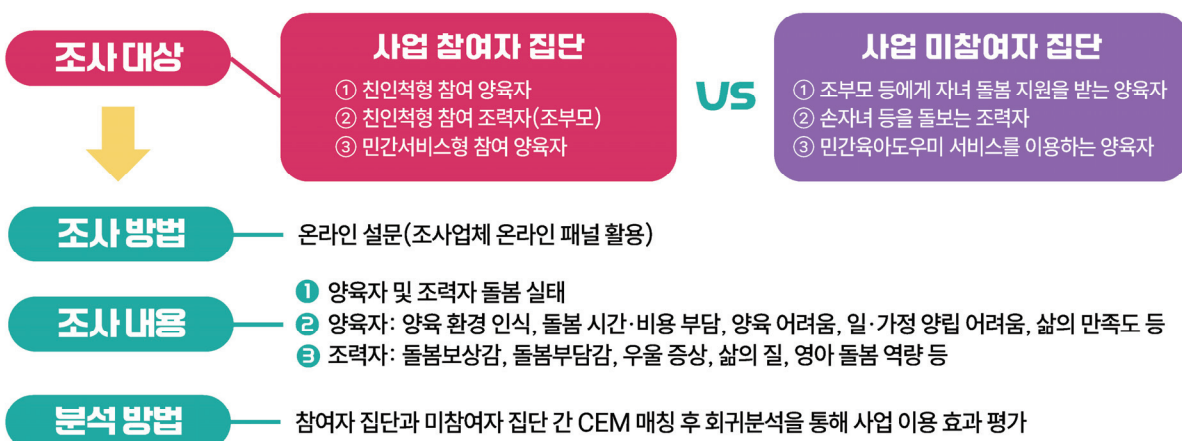
- ✓ 재정 건전성
- ✓ 전담 인력 및 사무공간 보유
- ✓ 인력풀 규모
-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 이용자 편의성
- ✓ 안전관리 대책
- ✓ 홍보 및 협력 체계 등

사업 이용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사업 이용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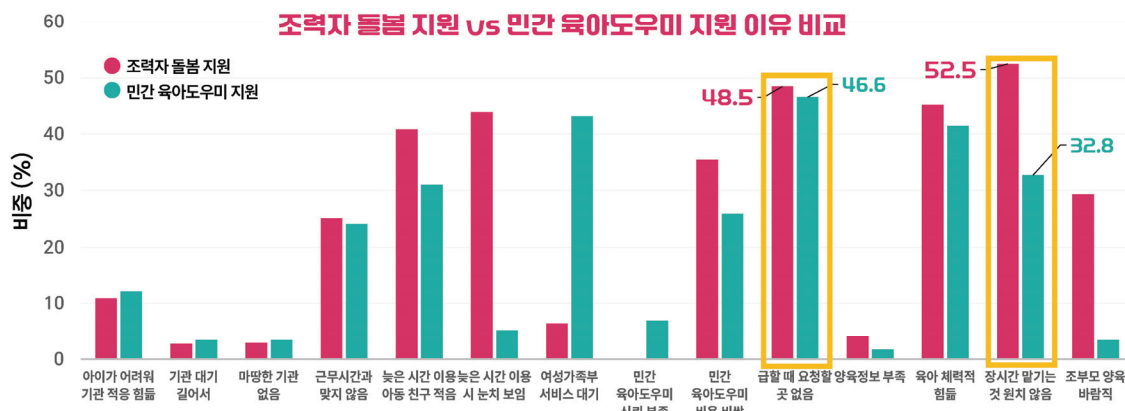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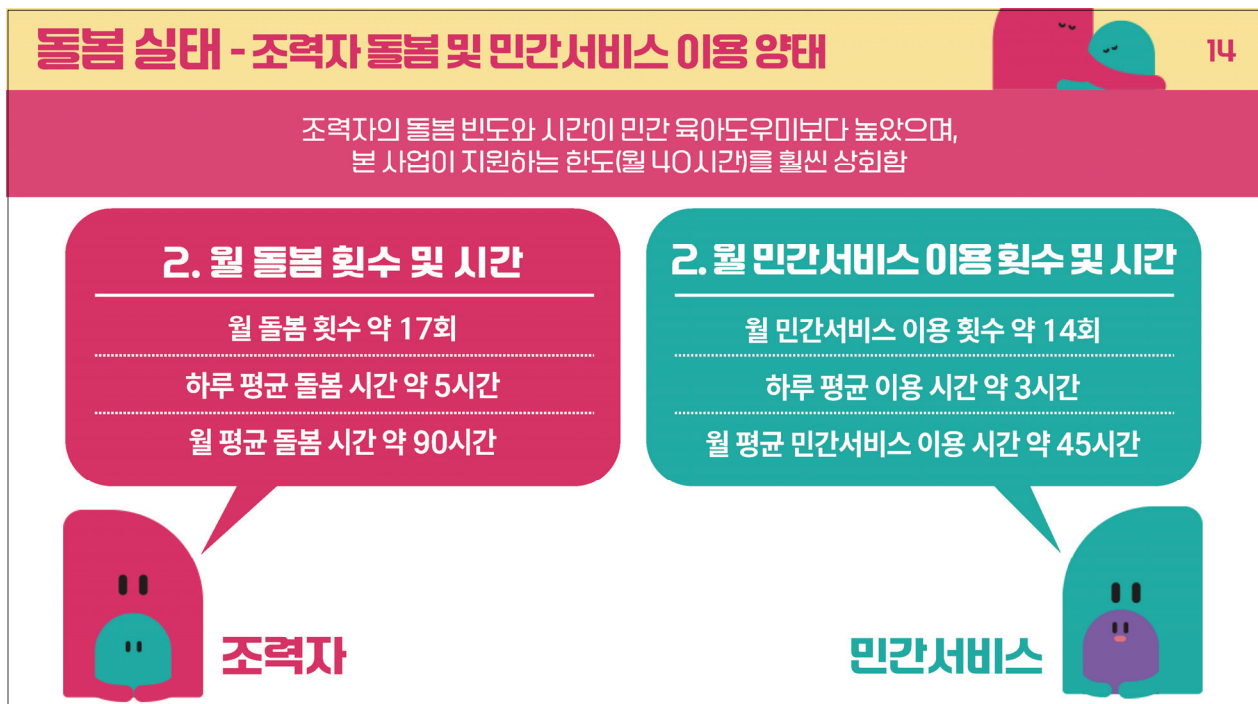
돌봄 실태 - 조력자 돌봄 지원/민간서비스 이용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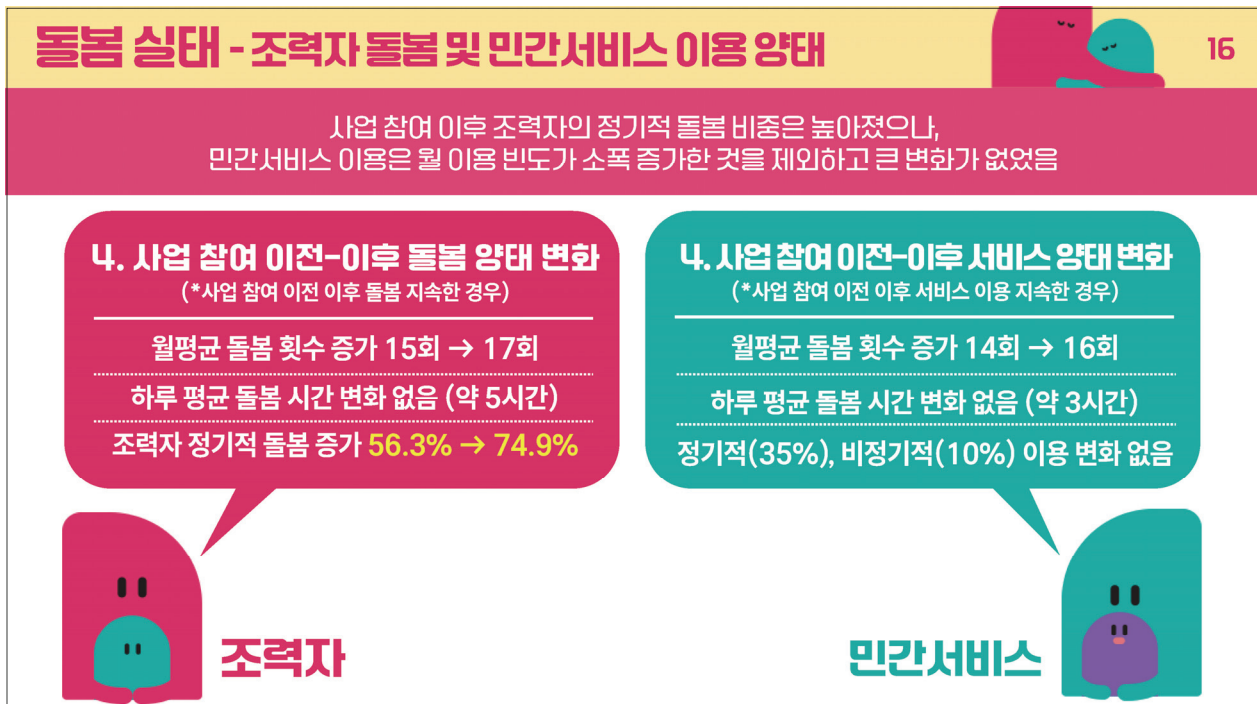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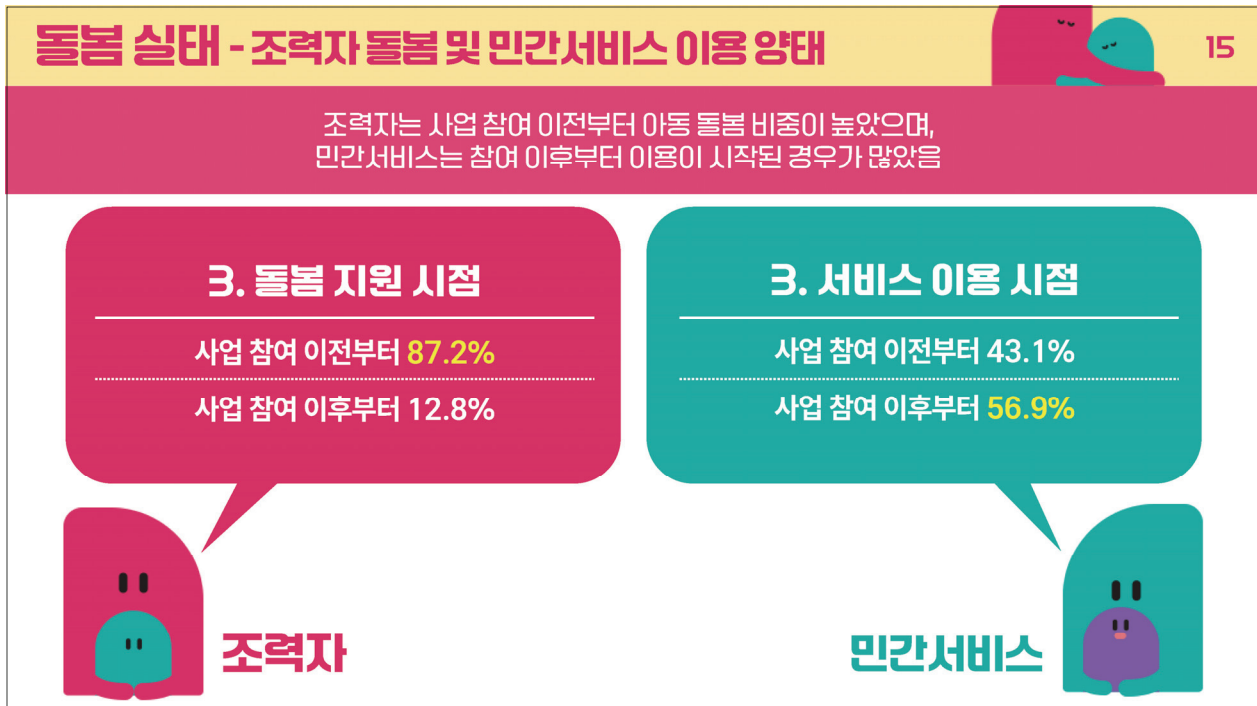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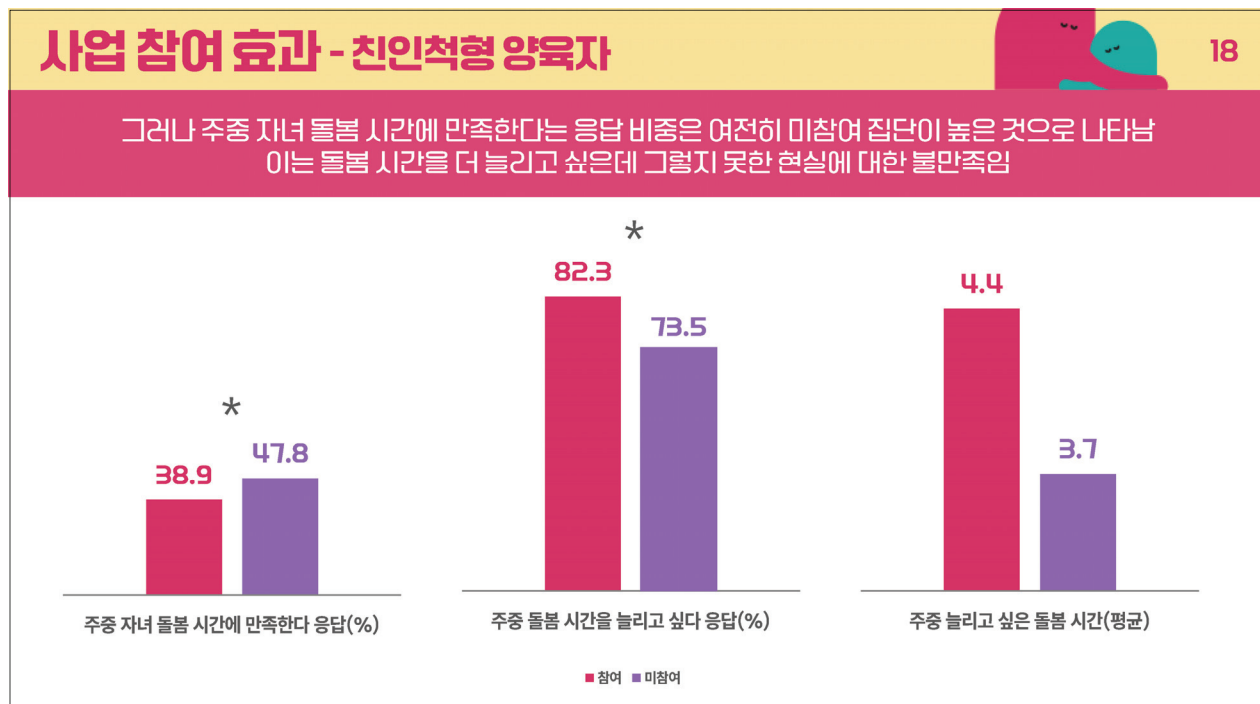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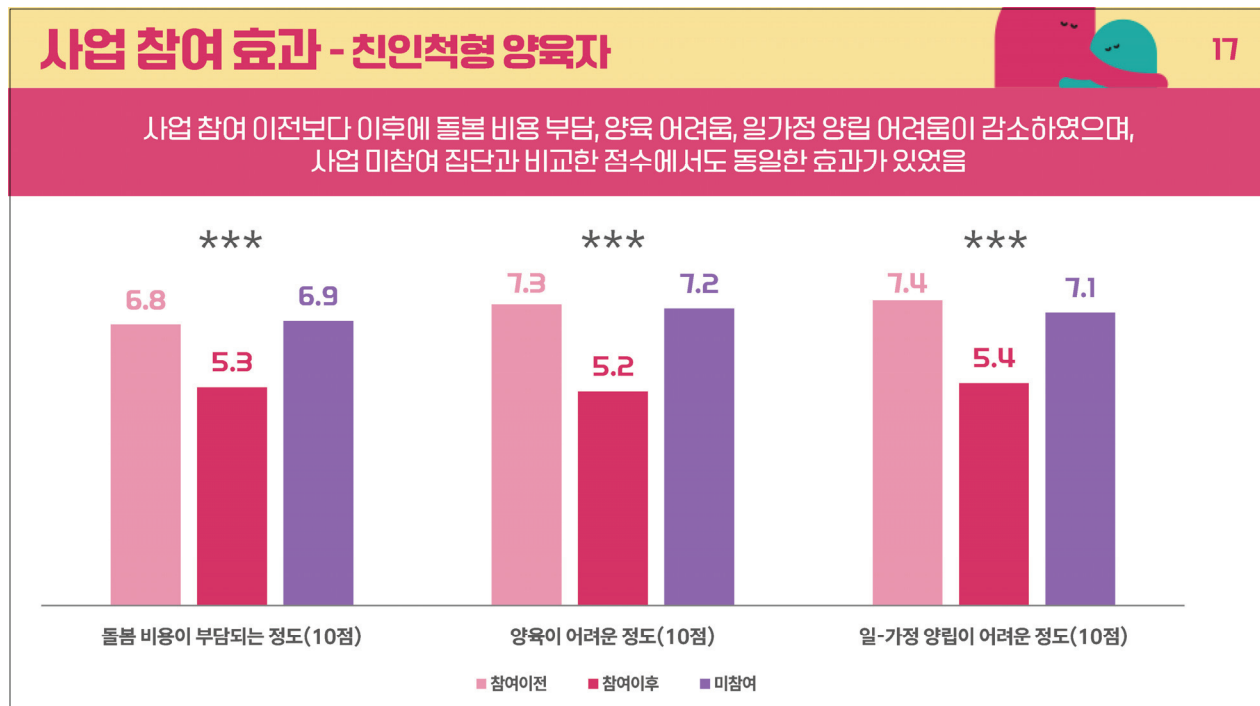
친인척형 이용자의 경우 '자녀를 장시간 기관에 맡기는 것을 원치 않아서', 민간서비스형 이용자의 경우 '급할 때 요청할 곳이 없어서'가 보완적 돌봄 수단을 동원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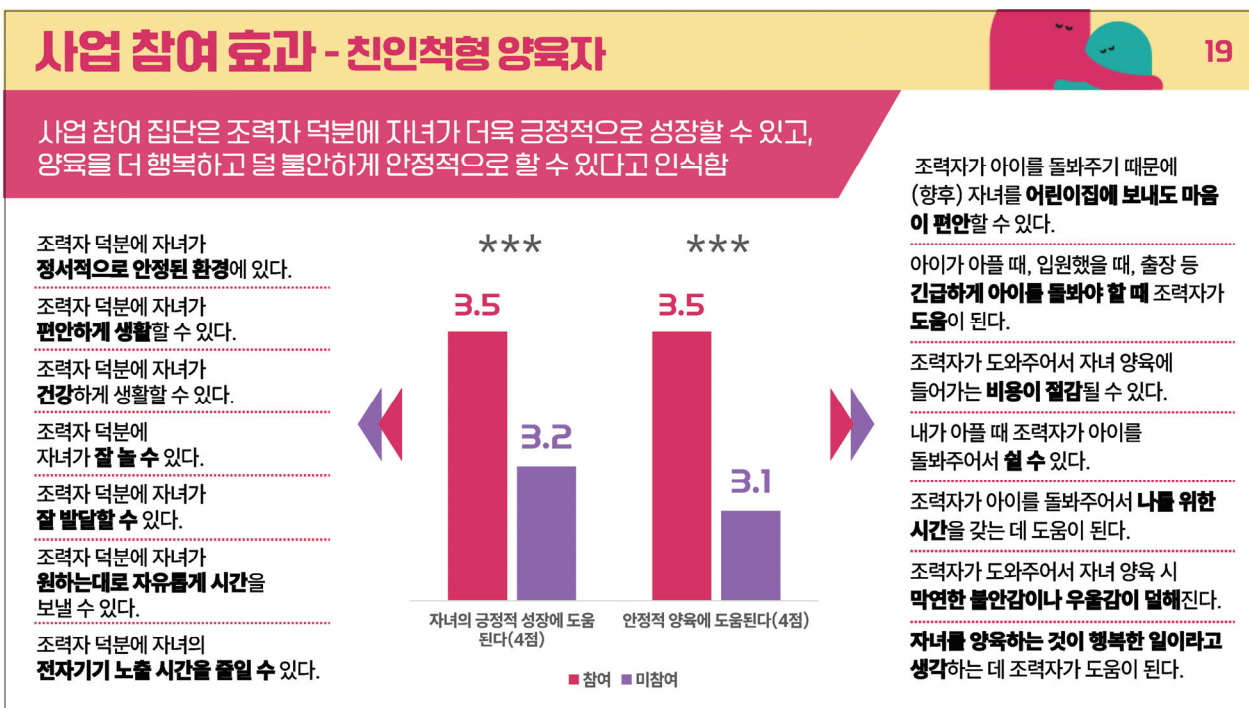


본 사업은 ①양육자의 노동시간과 가정 돌봄 필요 시간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돌봄 틈새, ②긴급할 때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음









사업 참여 효과 - 친인척형 조력자

20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얻는 돌봄보상감에 대한 척도를 활용하여 사업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의 점수를 비교함

돌봄 보상감이란?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안과 만족을 얻는 심리적 상태 (박경애, 2007)

구분	정의
신체적보상감	실제로 건강이 취약한 고령임에도 손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인지하는 보람과 만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문제를 별로 느끼지 못하거나 손자녀들을 돌보는 것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것
정서적보상감	조부모가 손자녀와의 친밀감이나 사랑과 같은 심리적 지지를 통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키운 보람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생산감을 인지하는 것
경제적보상감	손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가족, 친지 등으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이나 후원 및 용돈을 제공받는 등의 경험
사회적보상감	가족 간의 유대관계 증진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얻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등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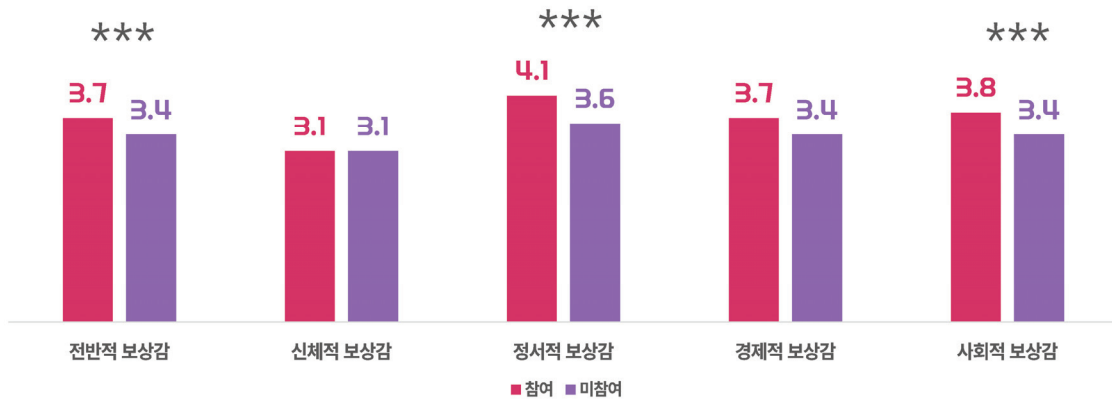
출처 : 박경애(2007). 사회적 지지가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보상감에 미치는 영향

사업 참여 효과 - 친인척형 조력자

21

참여 집단에서 신체적 보상감을 제외한 돌봄 보상감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확인됨

돌봄 보상감(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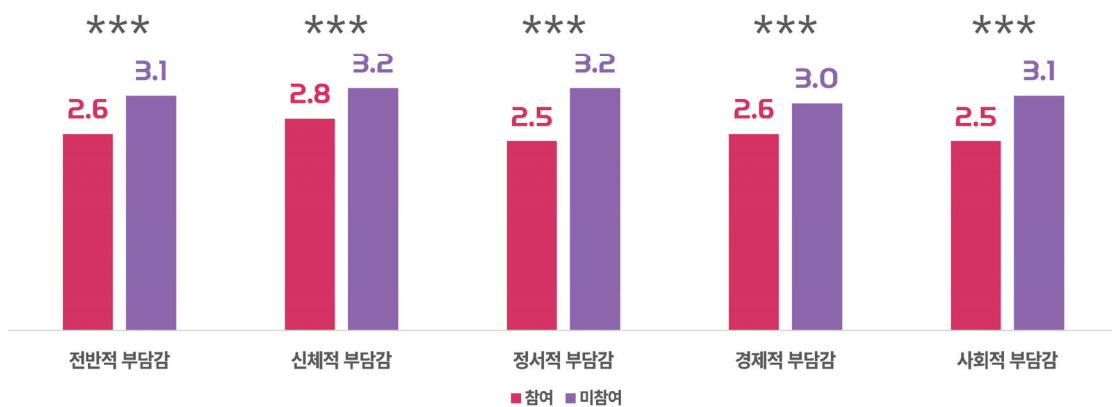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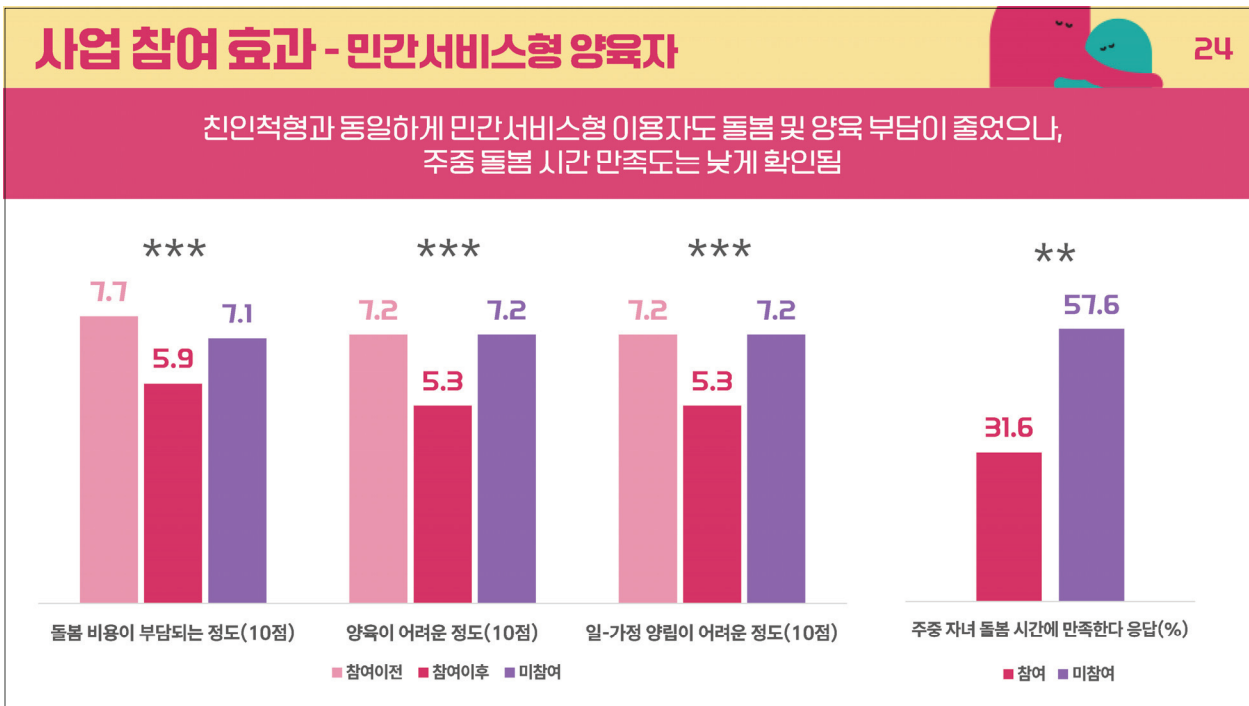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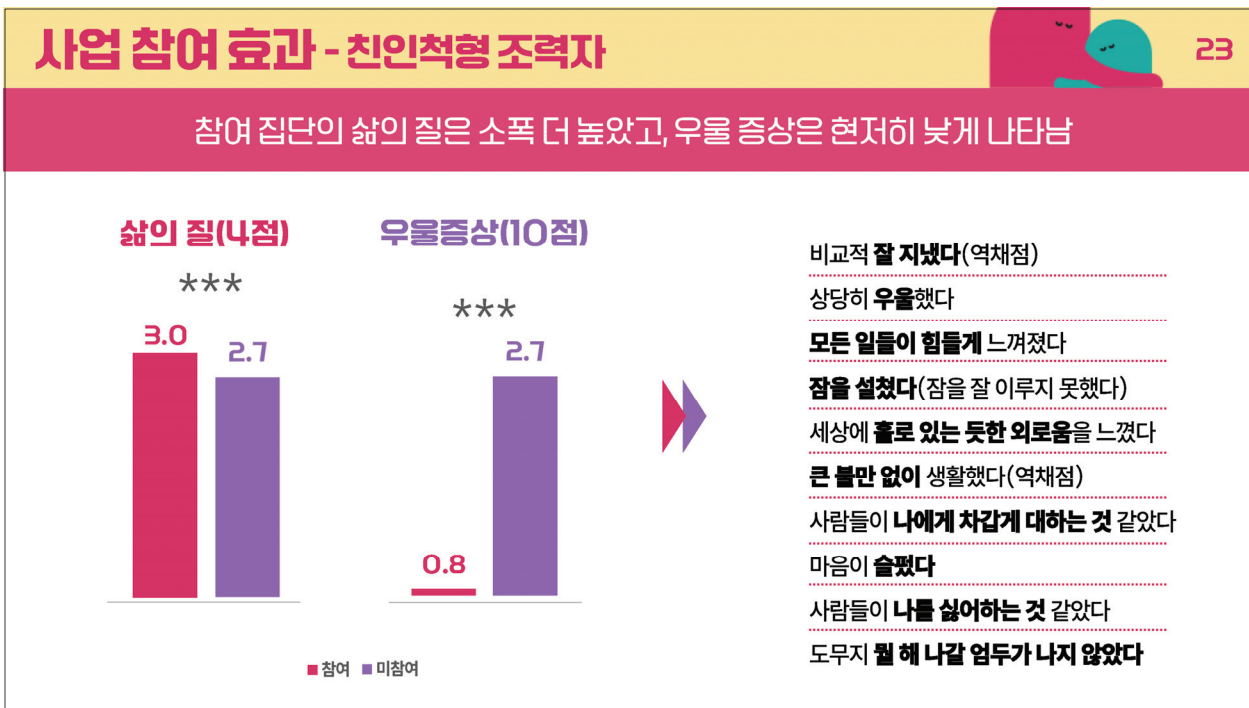
사업 참여 효과 - 친인척형 조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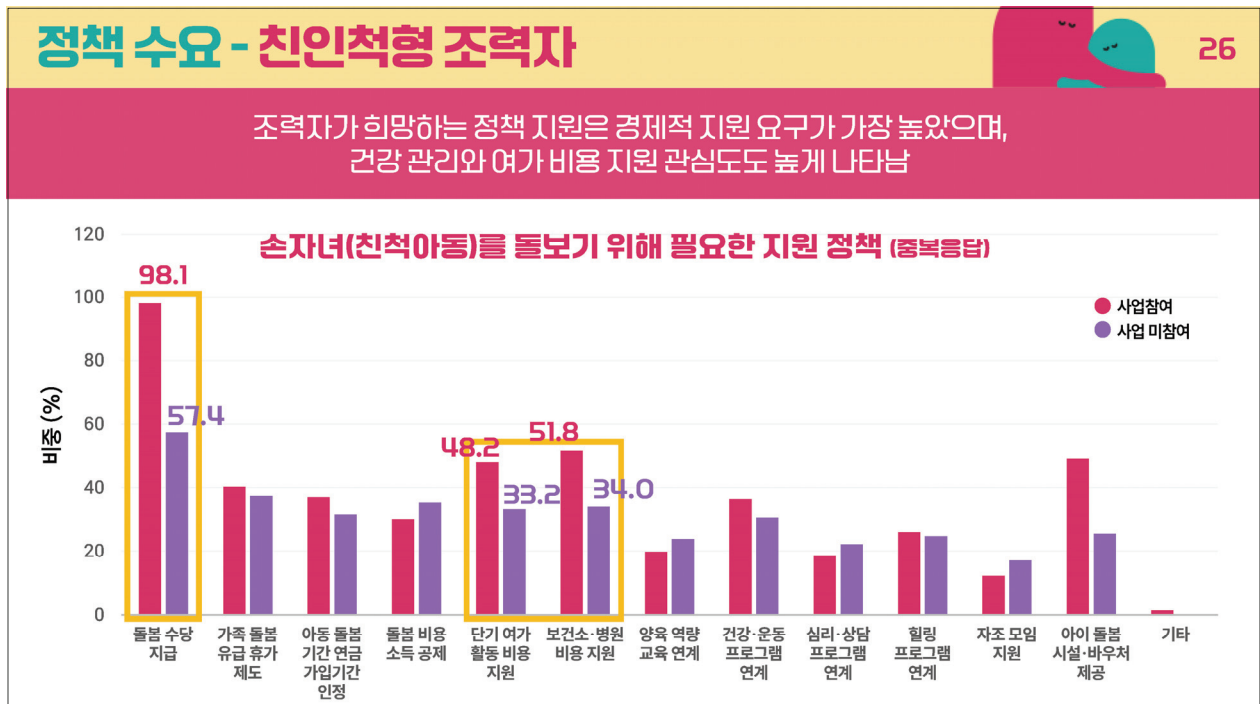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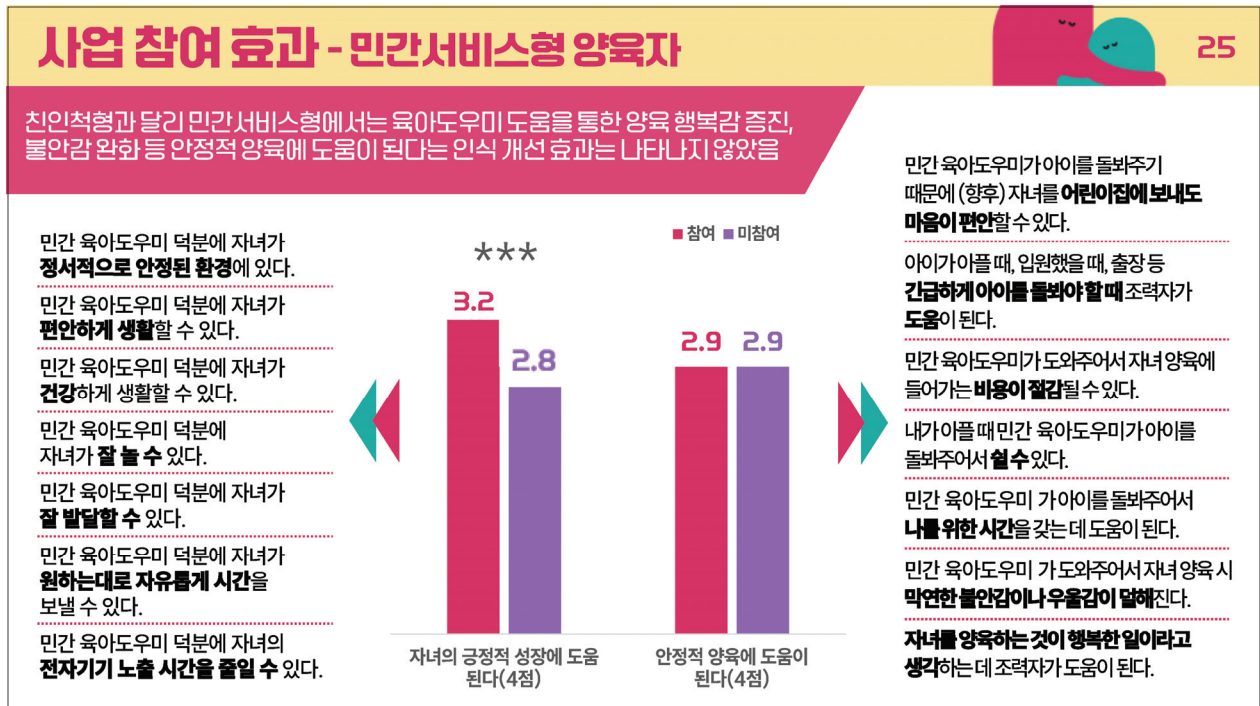
22

반대로 돌봄 부담감은 참여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더 낮게 나타남

돌봄 부담감(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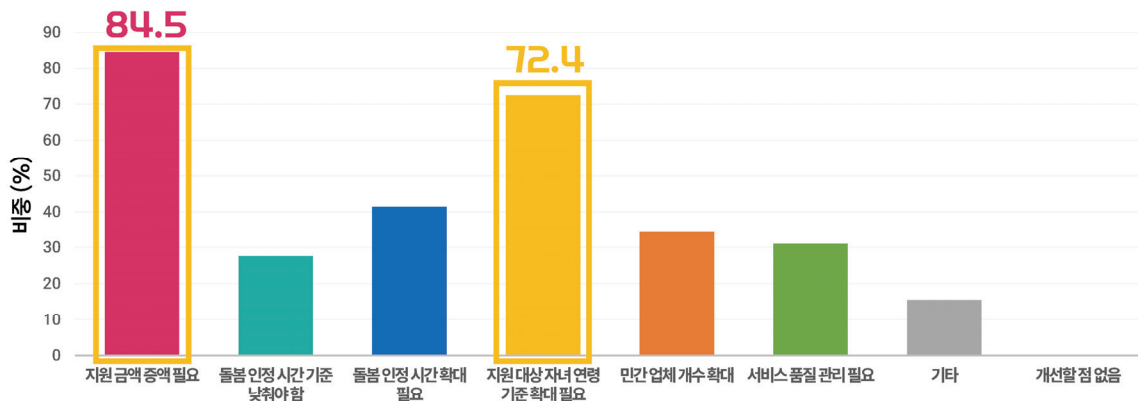


정책 수요 - 민간서비스형 참여 양육자

27

민간서비스형 이용 가정은 자기부담금 경감과 연령 기준 확대를 주요 개선 과제로 요구함

민간서비스형 양육자의 사업 개선 요구 내용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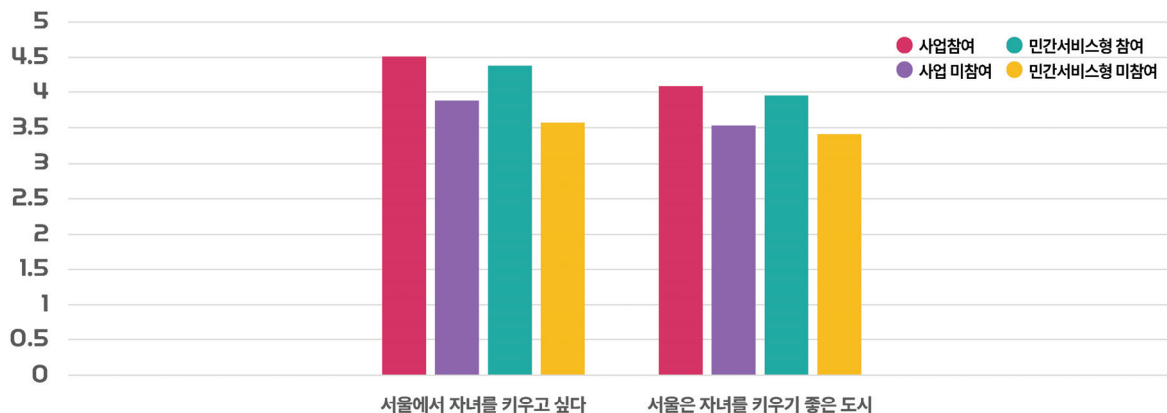


정책 평가 - 사회적 인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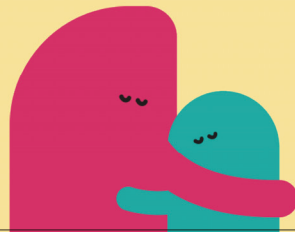
28

사업 참여자에게서 서울시 양육 친화 이미지 제고 효과가 확인됨

자녀 양육의 사회적 인정과 환경에 대한 의견 (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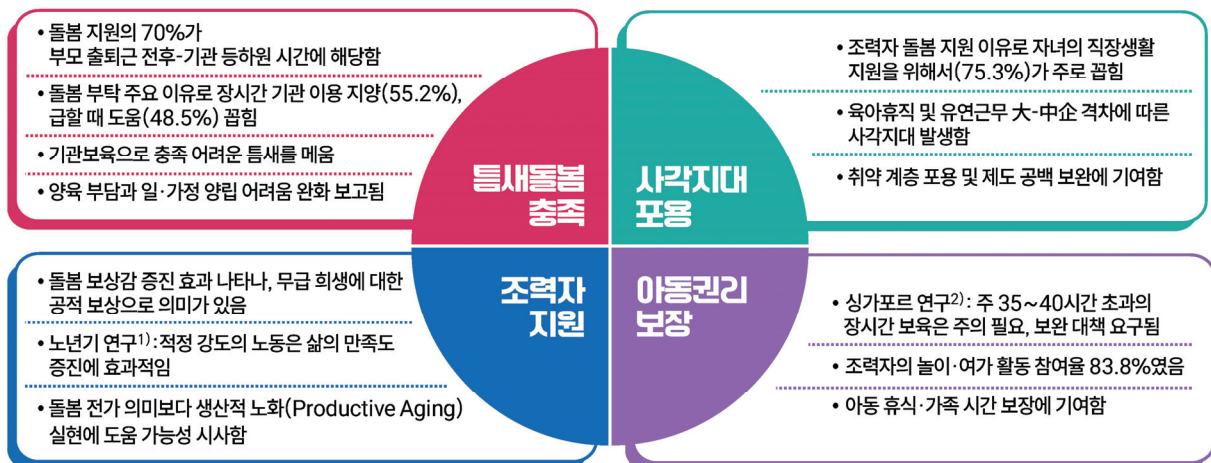
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돌봄 선택권과 지속성 강화를 위한 논의

30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총체적 평가



1) Guiney, H., & Machado, L. (2023). Volunteering and wellbeing among ageing adults: A longitudinal analysis.

2) Hart, E. R., Vandell, D. L., Whitaker, A. A., & Watts, T. W. (2023). Child care and family processes: Bi-directional relations between child care quality, home environments, and maternal depression.

사업 성과 및 발전 방안

31

발전 방안 1. 틈새돌봄 선택권 보장 강화

- 양육자 노동시간 단축 및 돌봄 사회화 전제
-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틈새 지원 정책 목표 강화
- 민간서비스형 저조 원인 해소(비용·품질·편의성)
- 2026년 여성가족부 민간서비스기관 등록제와 연계 및 차별화 방안 마련
(예: 심야·긴급 돌봄 서비스 연계 증대 등 틈새 특화 체계 보완)

발전 방안 2. 지원 기간의 유연한 선택권 보장

- 각 가정 상황에 맞춰 선택 가능하도록 만 2~6세 지원 기간 유연화 및 확대
- 단, 아래 사항을 추적 연구하며 단계적 진행 필요
 - 유아기 사교육 경향 고려하여 본 사업이 아동 휴식 및 가족 간 시간 증대에 기여하는지 추적
 - 조력자 돌봄 장기화 시 보상감 및 부담감 변화 추적
 - 다른 돌봄 제도와의 관계성 점검하여 본 사업의 역할 지속 관찰

사업 성과 및 발전 방안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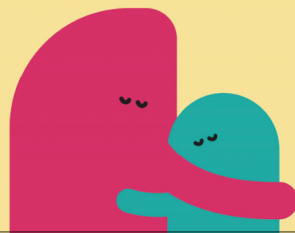
발전 방안 3. 운영 체계의 질적 보완

- 실시간 돌봄활동 확인 시스템을 통한 긴급 돌봄 대응 체계 강화
- 돌봄활동 질 담보를 위한 서비스 및 모니터링 도입
 - 조력자 대상 일대일 코칭 서비스
 - 민간 육아도우미 활동 질 모니터링

발전 방안 4. 제도적 연계 및 확대

- 조력자 금전적 지원 외 중앙정부 제도와 연계한 사회적 보상 고려
 - 케어뱅크(돌봄시간 포인트 적립) 사업과 연계 가능
- 특수 상황 단기 집중 지원 및 양육 공백 취약 가구 추가 지원 등 고려
 - 방학, 질병 등 특수 상황에 대한 집중 지원 등 촘촘하고 유연한 체계 마련 고려
 - 미취학 다자녀 가구, 비표준 근로 형태 가구 등 맞춤형 추가 지원 고려

감사합니다



[세션2] 라운드테이블 토론

토론

“저출생 극복, 가족분야 협력 체계 모델 구축”

[좌장]

김성희 여주대학교 교수

[토론자]

윤성은 한국가족센터협회 협회장

안현미 돌봄정책&젠더연구소 소장

황경란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이윤정 호서대학교 교수

이현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토론 1

윤성은

한국가족센터협회 협회장

2025년 서울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 “서울시 저출생 극복 ‘골드타임’”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서울시 가족센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연구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가족정책학회와 함께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현장·학계·정책 협력체계를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이 자리를 통해 좋은 모델이 제시될 것을 기대합니다. 공동포럼을 준비해주시는 서울시가족센터 홍우정 센터장님과 센터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지원해주시는 서울시의 앞서가는 행정에 감사합니다.

2015년부터 시작하여 11회 보고서가 나온 서울가족보고서는 서울시의 선진적 가족정책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가족의 변화, 육구의 변화, 정책의 적용을 구체적 종적 자료로서 제시하여 가족정책의 기반이 되는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가족보고서와 2025년 발표 자료를 근거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가족현장의 스타 모델 사업 ‘서울가족학교’ 다음 사업은?

- 가족 사업은 다양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부부교육과 상담 및 가족문화조성을 목표로 하기에 사업의 종류와 범위가 넓음
- 모든 가족의 육구를 담아 내려는 노력으로 인해 대표 사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있음
- 이런 딜레마에서 대표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 광역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고 봄
- ‘서울 가족학교’를 통해 사업이 정교화되었고 장기간 사업 운영으로 인한 노하우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25개 자치구 시민이 동일한 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음
- 타 지역 대표적 벤치마킹 사례임
- 2025년 서울 서베이에서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어렵고 부모교육 및 양육코칭에 대한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세대 스타 ‘서울가족학교’를 기반으로 2세대 ‘부모교육 및 양육코칭’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준비가 필요함
- 이미 서울시가족센터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모델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 서울서베이의 육구를 기반으로 신규사업을 개발 및 시범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자녀양육에 긍정적인 부모는 둘째아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점을 고려하여 저출산 정책에서 둘째자녀 출생의 좋은 모티브가 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사료됨

2. 일상 응원 그리고 부모 응원을 위해 가족의 문화를 조성하는 가족현장

- 부모가 한팀이 되기 위해 남성돌봄 사업이 확대가 필요
- 가족센터는 초기부터 일가정양립지원, 남성돌봄확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함 (건강가정기본법 제28조 2항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 현장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남성돌봄사업에 대한 서울형 모델 필요
- 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기준에 맞는 사업 모델 제시 필요
- 탄생응원 시즌2에서 일생활균형 양육친화분야의 핵심과제의 주요 정책이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이라면 다음 단계로서 남성돌봄확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함
예시) 남성육아휴직제도의 확산과 함께 육아휴직중인 아빠들을 위한 인프라 및 교육이 필요함
- 여성중심의 인프라 속에서 육아휴직 아빠들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동시에 경력·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복귀전 직장 내 변화대응, 커리어 설계, 리더십, 일과돌봄의 균형잡기등)의 지원함으로써 남성육아휴직자들을 불안감소 및 맞돌봄의 가족문화 조성

3. 가족변화를 담아내는 현장 _ 지역 협력체계 구축

- 가족센터는 가족을 대상으로 예방과 개입의 두 개의 축으로 사업 운영
- 온보딩 사업을 통해 취약위기가족의 개입이 체계적화 및 안정화
- 온보딩 사업을 지역사회협력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취약위기 개입에 있어 국가보조금 기관으로서 대상이 취약계층으로 한정
- 취약은 아니지만 위기 단계나 예방이 필요한 맞벌이부부, 한부모, 1인가구등 다양해지는 가족들의 요구들을 충족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음
- 예방이 가지는 효율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개입이 아닌 예방으로 과점을 돌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체계 구성의 필요성이 증가함
- 이를 위한 연구 및 정책적 지원대안이 필요함

토론 2

안현미

돌봄정책&젠더연구소 소장

□ 주제발표 3건 모두 공통적으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시민 요구와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주장하고 있음. 일·생활균형을 위해서는 (노동)시장-국가(정책)-가정(생활)간 트릴레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첫째, 이미 기존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간주권” 개념과 함께 실질화를 위한 주4.5일제 또는 주4일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 및 확대 방안 논의가 필요함. 발표2, 발표3에서도 제안하고 있듯이 이는 절대적인 돌봄시간 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다만, 대기업 중심의 차원보다는 중소기업 차원에서 서울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둘째, 돌봄 집중 시기에 따른 “시간주권=조정가능성” 체계 마련임. 예를 들어,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의 일정 기간, 즉 임신~3개월, 8개월~출산 등 기간을 제한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전 임신기와 육아기 0~12세의 보편적 돌봄이 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전 임신기 2시간 지원은 임금 100%보존 등)
- 둘째,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가족친화인증제 내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수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 804만개(출처: '22년 중소기업기본통계) 중 0.06%, 대기업 3,318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중 23.6% 등에 불과함

〈친화인증기업 기관 수(누적)〉

(단위: 개, %)

연도	계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N	N	N	N
2024	6,502	784	4,552	1,166
2020	4,340	456	2,839	1,045
2015	1,363	258	702	403
2010	31	11	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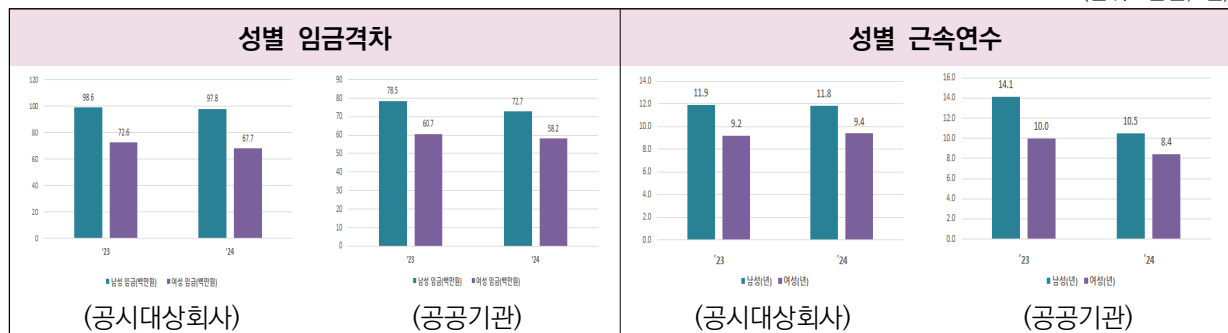
자료: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26)

- 그렇다면, 서울시 저출생 대응정책의 “일생활균형 사각지대 보완, 워라벨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확대 (중소기업워라벨 포인트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부 출산급여 등) 노력은 적절한 정책 방향인가?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 셋째,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성평등고용·임금공시제 법제화(의무화) 필요함(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에만 적용, 공시지표도 제한적이고, 민간기업은 자율적 참여로 실효성 문제 제기됨)(아래 박스 보충자료 참조)
- 성평등고용·임금공시제를 적극 수용, 확대하고, 중요한 것은 그 결과(성별임금격차, 성별고용격차 등)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중요함. 즉,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중장기적 정책 플랜이 필요함(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형평임금법’, EU의 ‘임금투명성법’을 참조 등 참조)

- ✓ 공시대상회사(2,980개) 평균 임금: 남성 9,780만 원(1인당 평균임금), 여성 6,773만 원, 성별 임금 격차는 30.7%(전년(26.3%) 대비 4.4%p 증가). 남녀 평균임금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여성의 임금 감소폭(-6.7%)이 남성(-0.8%)보다 커지면서*, 격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 공공기관(344개) 평균 임금: 남성 7,267만 원(1인당 평균임금), 여성 5,816만 원, 성별 임금격차는 20.0%(전년 (22.7%) 대비 2.7%p 감소)
- ✓ 공시대상회사의 평균 근속연수: 남성 11.8년, 여성 9.4년, 성별 격차는 20.9%이며, 전년(23.0%) 대비 2.1%p 감소
- ✓ 공공기관의 평균 근속연수: 남성 10.5년, 여성 8.4년, 성별 격차는 19.9%, 전년(29.0%) 대비 9.1%p 감소

〈2023년 vs 2024년 공시대상회사, 공공기관 성별임금·근속연수 격차〉

(단위: 만원, 년)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5.9.5. 보도)

- 넷째, 유·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인정 및 보상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제도 규정 마련과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2025년 9월말 기준, 광주광역시도 통합 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고, 경남, 전남, 경기도, 울산, 인천, 5개 광역 지자체를 포함하여 총 36개(서울특별시 노원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종로구, 구로구 등 포함)의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관련 조례가 제정됨

✓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2022년 제정)

- 제2조(정의) “통합 돌봄”이란 영유아, 아동·청소년, 1인 가구,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를 말한다.
- 제5조(기본계획)(재원조달 방안 등)
- 제6조(통합 돌봄 서비스) 시장은 통합 돌봄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돌봄 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기존 돌봄 서비스의 이용 확대
 2. 가사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건강지원, 정서지원, 주거편의, 일시보호, 긴급 돌봄 등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의 발굴 및 서비스 제공
 3. 돌봄 서비스 간의 통합·연계
 4. 그 밖에 통합 돌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전문인력 교육훈련)

✓ 경남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2022년 제정)(경남이외 거제시,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하동군)

- 돌봄노동자 =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아이돌보미, 기타(유사한 돌봄업무 수행 인력 등)
-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실태조사)
- 제7조(사업)
 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구직활동 지원
 2.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 강화 교육
 3.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
 5.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5조(권리보장), 제6조(기본계획), 제7조(실태조사)
-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1.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2. 돌봄 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 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4. 돌봄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 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
 6.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돌봄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2조(정의) 장기요양요원,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 기타 등으로만 정의하고 있음
- 제9조(경기도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제11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 다음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돌봄관점에서의 정책 재편”이 필요함. 기존의 제도적 틀에서 보완수준을 넘어서서 돌봄기본법 마련(돌봄 이념과 기본 원칙, 중장기 계획 수립, 돌봄 적정 가치 산정, 돌봄 지원,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 전달체계 개편, 돌봄시민교육, 긴급 돌봄 콜센터 운영 등)

- ✓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등

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서울(본청)지역 “돌봄” 키워드로 검색시 일부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 서울시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 재편 이외에 현재 기 실시되고 있는 제도적 개선 노력 또한 필요함
 - 첫째, 돌봄 집중 시기에 따른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의 일정 기간, 즉 임신~3개월, 7개월~출산기간 제한적 근무시간 단축 지원이 아니라 전 임신기와 육아기 0~12세의 보편적 돌봄이 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 둘째, 돌봄정책의 지형 변화에 따른 지역균형적 접근 필요함.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 용이한 돌봄기관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 주요한 성과 기준임. 인구학적 위기 이후 지역균형적 돌봄 공급 및 접근 용이한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해졌는데,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의 보다 적극적이고 면밀한 지원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0~12세 인구 감소지역과 인구 증가 지역의 영아, 유아, 초등연령별 돌봄서비스 수요와 공급 분석을 토대로 한 실태 및 정책 방안 마련 등임
 - 셋째,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다음 두 가지에 대해 말하고자 함. 하나는 출생아 또한 계층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정책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임. 돌봄 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높은, 즉 출생아 수가 높은 지역에 집중하다보면 고소득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음. 다음으로 공공과 민간의 상생구조는 현재 공급구조에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이 공공 서비스가 지배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구조에서의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기관 확대 방안과 산모신생아지원사업과 같이 공공 공급기관 부재 하에 민간기관 인증제를 통한 서비스 공급 방식은 차이가 있음. 현재 돌봄서비스 수급 구조를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간지원조직 등의 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이용자중심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중간지원조직의 종사자 처우 및 근로 환경임.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아이돌봄센터 등임. 돌봄서비스는 대인서비스로 민감한 서비스인 만큼 관련된 민원도 매우 높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이직율도 높음. 그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이 결국 서비스 질과 연결됨에도 이용자 중심의 정책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추후 전달체계 성과관리 및 내실화를 통한 정책대안 마련 또한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육중장기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함(역량강화뿐 아니라 마음건강, 정서적 지원 등)

토론 3

환경란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한국 사회는 2025년 상반기 합계출산율 0.7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한 출산 기피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장시간 근로 관행과 제한적인 공적 돌봄 체계 간의 구조적 불일치에서 비롯된 복합적 위기이다. 서울시 양육자 생활 실태 조사(2024)에 따르면 부모 외 자녀 돌봄 형태 중 조부모 돌봄이 62%를 차지하며, 충북에서는 미취학 자녀 가구의 조부모 손자녀 돌봄 비율이 2022년 9.1%에서 2024년 18.3%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공적 돌봄 체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현실적으로 대응 가능한 조부모 등이 메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쟁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 평균 8시간 이상 근로시간, 유연한 근무제도 활용의 현실적 제약들은 돌봄 부담과 불안이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1. 제도의 확장과 돌봄공백

한국사회에서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된 약 20년의 시간 동안 공적보육체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왔고,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체계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일·가족 양립 제도와 유연근무제도 역시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다양한 제도의 구축과 성장 속에서 제도적 단절과 공백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생활 균형 제도가 공직자 및 정규직·사무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활용되는 현실, 실질적인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이 9~16시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열이 나거나 전염력이 있는 질병이 확인되면 당장 등원시킬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어떠한 제도도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돌봄 공백의 범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주체가 구축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를 국가, 시장, 지역사회, 가족으로 구성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돌봄 다이아몬드(care diamond)라 지칭한다(Soma et al., 2011; 박수지 외, 2014). 이에 가족이나 친지에 의해 돌봄이 제공되더라도 공적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공 주체는 가족이지만 비용은 공적 재원에 의해 분담된다.

다만, 조부모 돌봄수당은 원거리 거주, 조부모의 경제활동 및 신체적 제약 등 아이를 돌봐 줄 조부모·친인척이 없는 경우에 오히려 격차를 만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 위험이 큰 데다가, 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가족이 돌봄의 대부분을 담당해왔다 보니, 친인척의 돌봄을 공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저항감이 큰 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조부모 돌봄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공적 체계 안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틈새 돌봄’으로서의 가장 현실적 대응이 가능한 방안, 조부모 등 친·인척 돌봄

한국의 맞벌이 부모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간과 돌봄 가능 시간의 구조적 불일치이다. 어린이집은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본 운영되며, 연장 보육이 있어도 오후 7시 30분을 넘기기 어렵다. 반면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평균보다 높은 1,915시간이며, 출퇴근 시간은 서울 수도권 평균 왕복 2시간을 초과한다. 서울시 일생활균형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경험에 있는 근로자는 24.5%에 불과하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자영업자는 이러한 제도 자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서울시 연구에서 조부모 돌봄 지원의 70%가 부모 출퇴근 전후와 기관 등하원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충북에서 진행한 조부모 돌봄수당에 관한 연구에서도 면접조사를 통해 ‘장시간 기관 이용 지양’ 55.2%와 ‘급할 때 도움 요청’ 48.5%가 조부모께 자녀 돌봄을 요청하는 주된 이유로 확인된 바 있다. 여기서 ‘틈새 돌봄’이란 기관 보육이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 즉 이른 아침, 늦은 오후, 저녁 시간 및 기관 휴원일, 자녀 질병 등 긴급 상황에서 발생하는 단시간 또는 불규칙 돌봄을 의미한다. 또한 충북의 조부모들은 “딸이 안 됐어서”, “애가 벌어먹고 살려니까 봐줘야지”라고 표현하며, 자녀의 경력단절 방지와 맞벌이 지원을 돌봄의 주된 동기로 꼽았다. 이는 조부모 돌봄이 단순히 손자녀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성인 자녀가 직면한 노동시장의 가혹함에 대한 가족적 대응임을 보여준다.

즉, 다각적인 보육 제도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근로시간과 아이들이 버틸 수 있는 보육 가능시간 간의 괴리, 보육서비스 질과 주체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자녀 돌봄 공백 해소의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서 조부모의 돌봄이 고려되고, 많이 활용된다는 것 역시 사실이기에 본 토론문에서는 충북에서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을 위해 검토한 내용,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 관한 발표자료를 토대로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다자 협력 모델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OECD 주요국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조부모 돌봄에 대해 세금 공제와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독일은 부모수당과 함께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연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일본은 3세대 동거 지원 정책으로 주택 자금 대출 우대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들 국가는 조부모 돌봄을 인정하면서도 공적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통해 조부모 돌봄 지원을 수당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2023년 10월 시작되어 2024년 12월 기준 누적 약 4,300가구가 참여했다. 친인척형이 전체의 98%를 차지하며, 4촌 이내 친인척이 24-36개월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1명당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 사회복지연구원의 효과 분석(2024)에 따르면 사업 참여 집단은 미참여 집단에 비해 돌봄 비용 부담이 평균 6.8점에서 5.3점으로, 양육 어려움이 7.3점에서 5.2점으로, 일-가정 양립 어려움이 7.4점에서 5.4점으로 각각 감소했다(10점 만점). 주중 자녀 돌봄 시간 만족도는 38.9%에서 82.3%로 급증했다.

황경란(2025)에 의하면 충북의 조부모들은 자녀의 직장생활 지원을 돌봄 제공의 주된 이유로 꼽았으며, 장시간 아이를 안고 돌보는 과정에서 허리, 무릎, 손목 등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했다. 조부모들은 돌봄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도파민이 넘치는”)과 생활 활력을 얻으며, 과거 자녀 양육 시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손자녀 돌봄을 통해 보상하려는 심리를 보였다. 동시에 손자녀의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감으로 인해 정서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며, 일부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창살 없는 감옥”으로 표현했다.

3.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로써 친·인척 돌봄 지원의 향후 방향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친·인척 돌봄수당 제도는 기존에 조부모 돌봄수당 등 친인척 돌봄수당제도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명확한 원칙 하에 설계되어야 한다. 첫째, 이 정책은 공적 돌봄 확충과 노동시간 단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과도기적 정책이다. 둘째, 지원 대상은 돌봄 공백이 실제로 발생하는 가구로 제한하며, 조부모 돌봄이 편의가 아니라 필수인 경우에 집중한다. 셋째, 조부모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지원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돌봄 시간은 월 40-100시간 정도의 적정 범위로 관리한다. 넷째, 이 정책의 성과는 양육자의 경력 유지율, 일-생활 균형 개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조부모 돌봄 의존도 감소로 측정되어야 한다.

단,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의 양육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떠한 하나의 대안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충분한 대안이 되기 어렵기에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돌봄 다이아몬드 모델을 고려한 국가, 시장, 지역사회, 가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조부모 돌봄은 공적 돌봄 서비스 접근성 개선, 일-생활 균형 개선을 토대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최소화하여 그 의존도가 감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부모 돌봄이 현실적으로 조모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하여 아빠와 할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특화 교육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조부모 및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민간서비스형 활성화,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노인일자리 연계 돌봄 지원 등 대안적 경로를 함께 마련하려는 방안 역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박수지·김보영·김형용·박수진·박혜미·윤성원·최연혁·홍이진·김가희·이주연(2014), 사회서비스정책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2014-25).

최현희(2025), 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2025 서울가족정책공동심포지엄 발표자료.

황경란(2025), 충북 조부모 돌봄수당 수요분석 및 사례연구. 충북여성재단 현안연구보고서.

토론 4

이윤정

호서대학교 교수

들어가며

저출생은 단순히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문제를 넘어, 주거·고용·돌봄·문화 전반에 얽힌 구조적 과제이다. 2025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2년 연속 소폭 상승했다는 정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는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58명으로 동년의 전국 평균(잠정치 0.75명)보다 현저히 낮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불안정한 고용 및 돌봄 인프라 부족, 사회적 양육 지지 체계 미비, 그리고 전통적 성 역할 기대(여성의 양육 부담·남성의 부양 책임) 등 복합 요인이 저출생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저출생 해결은 단편적 현금 지원이나 개별 사업 중심 접근을 넘어, 정책-현장-학계의 긴밀한 협력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서울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은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각 분야가 무엇을,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로, 특히 서울가족서베이와 서울양육자서베이 등 최신 현황 자료가 공개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논의가 기대된다. 토론자로서 최근 자료를 토대로 현황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변화, 우리의 환경, 그리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출생 인식과 부모됨의 가치관

서울가족서베이(2024)에 따르면, 자녀를 직접 키워본 부모보다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청년층이 부모됨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서울은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지만, 부모가 될 의향은 점차 증가하는 흐름이 확인된다. 청년들은 “사랑 줄 존재가 생긴다”, “자녀를 통해 보람과 즐거움을 얻는다”와 같은 이유로 부모됨의 가치를 인정하는 한편, “기대만큼 잘 키울 자신이 없다”, “양육·교육비 부담”, “경제 불안정”, “양육 친화적이지 않은 사회 환경” 등을 이유로 자녀 낳기를 주저하였다. 그 경향성은 2025년에도 이어지는 분위기이다. 전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부모됨에 대한 자신감이 더 낮았다. 여성은 “기대만큼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에 더 동의했고, “나는 좋은 부모가 될 능력이 있다”에는 응답률이 낮았다. 이는 모성 이데올로기 등 완벽한 엄마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많이 배우고, 많이 보고 듣고, 쉽없이 경쟁하며 자란 세대들에게 완벽하기보다 ‘충분히 좋은 부모(good enough parent)’ 개념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심적 부담과 불안을 완화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부모됨의 긍정적 가치와 자녀와의 동반성장의 경험을 강조하는 사회적 메시지, 성평등한 가치관 확산 캠페인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 역할 기대(여성의 돌봄 책임·남성의 생계

부양)를 재조정하여, 자녀 돌봄과 가족 부양 부담을 성별에 관계없이 나눌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실제 생활시간조사에서도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2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평등한 돌봄과 부양 부담이 일상에서 여전히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가족서비스 분석에 따르면, 여성은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지원망’이, 남성은 ‘안정적 직장’과 ‘또래 집단의 가치관’이 부모됨의 의향을 높였다. 즉 여성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남성에게는 자녀친화적 사회 분위기가 부모됨 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동한다. 부모됨 의향에 영향을 주는 조건으로는 ‘자유로운 시간 활용’, ‘안정적 주거’, ‘믿고 맡길 돌봄 인프라’, ‘만족스러운 소득’, ‘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 환경’이 중요했다. 반면 출산 시 파격적 현금 지원(예, 1억 원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를 보여, 단순 현금보다 시간·주거·돌봄 인프라 개선이 정책 효과의 관건임을 시사한다.

돌봄 인프라와 정책 선호

돌봄은 세대 전반의 공통 화두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족 내 성인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을,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가 책임 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이재림 외, 2024). 실제 양육자들은 현금 지원보다 돌봄서비스, 특히 공공 돌봄의 확대를 더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아동 돌봄은 부모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반면 노인 돌봄은 국가 책임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현실적으로 부모들은 친인척보다 가족 외 돌봄서비스를, 민간보다 공공 돌봄서비스를 선호하지만, 동시에 조부모 돌봄 비중이 62%에 달하는 등 실제 선택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서울시 양육자 실태 조사, 2024).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3점으로 나타났고,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평균 7명의 대기 아동이 발생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 이는 곧 공공 돌봄 인프라 확대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현장 사례로,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 세련된 시설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또래와 보호교사와의 다양한 상호작용 기회, 식사 제공, 맞벌이 가구 우선 배정 등으로 만족도가 크다. 지역아동센터와는 다른 ‘틈새 돌봄’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성·접근성·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한 모델로 평가된다. 맞벌이 가구가 희망하면 소득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주거지 안에서 안전하게 놀고, 따뜻한 밥을 먹고, 이후 학원에 갈 수 있도록 살펴주는 ‘이모네, 삼촌네’ 같은 분위기의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수용 인원의 제한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골목 단위의 소규모 돌봄 거점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그리고 품질과 환경·프로그램을 강화해 신규 아파트 단지 내 중대형 돌봄 거점으로 자리 잡은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는 모두 자녀가 일상을 보낼 수 있는 대표적 ‘안심 돌봄 인프라’에 속한다. 이러한 거점이 생활권 가까이에 촘촘히 마련될 때 부모는 “아이를 낳아도 안심하고 키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일·가정의 균형 역시 가능해진다. 나아가 점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도 이러한 인프라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지역의 가족센터는 부모와 부부 역할을 지원하는 협력 기관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돌봄 인프라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저출생 정책의 추진 과정과 구조

서울시는 2022년 8월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0-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발표하고, 2023년 8월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2.0-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로 확대했으며, 같은 해 11월 「탄생응원 프로젝트」로 이어져 돌봄·일·생활균형·건강·출산 지원을 망라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는 1개 비전과 2개 목표(양육자 애로 해소, 예비 양육자 지원 강화), 5개 분야, 15개 추진전략, 52개 세부사업으로 체계화되었다. 다섯 개 분야의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안심 돌봄: 공보육·초등돌봄 확충, 돌봄 공백 지원, 다양한 가족 지원
- 편한 외출: 놀이환경 조성, 양육친화 외출환경, 예비 양육자 이동 지원
- 건강힐링: 임신부 지원 강화, 영유아 발달 지원, 건강한 식습관 지원
-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제도 확산, 가사부담 완화,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지원
- 탄생응원: 난임부부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결혼 지원, 탄생 축하문화 확산

사실 현금보다 서비스·공간·문화 전반에서 체감 가능한 환경 조성에 방점을 찍은 정책들이다. 중요한 것은 양육자의 체감도인데, 아직 주거 문제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일부는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 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해 지자체 재량과 제도 개선 권한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 사업과의 연계·보완(아이돌봄서비스, 육아휴직 급여, 가사서비스 등)에 집중해 왔다. 이 가운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친인척 돌봄 수당 및 민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비용 지원 규모는 크지 않으나 심리·정서적 부담 완화, 부모됨 자신감 회복, 출산의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여전히 혈연 기반의 신뢰가 돌봄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조부모 돌봄 선호 또한 높게 나타나지만, 아이돌봄비 지원은 단순 재정효과를 넘어 부모됨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회복하는 상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지속, 정규직 취업 그리고 부모로서의 양육 자신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되고 있어(이윤정, 2017, 2019, 2024), 향후 지원 범위와 접근성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타 지자체의 독창적 시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 2022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무상화를 시행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을 주저하던 가구도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부담없는 돌봄 서비스라는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아졌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인구인지예산’을 도입해 모든 정책을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설계·집행하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정책 등에 인구친화적 시각을 반영했다. 경상북도는 2017년부터 젊은 층의 주거 안정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시범사업,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통한 신규 서비스 도입 등으로 중앙 정부와의 중복을 피하면서도 독자적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전국 최저 수준의 출생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서울형’정책은 독창성과 차별성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종합대책은 분야 확대와 세부사업 다변화로 외연을 넓혔지만, 정책 목표와 세부사업 간 유기적 연결이 다소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세부사업 확대보다 정책 간 연결성 강화와 근거 기반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보편 정책과 긴밀히 연계하면서도, 시민이 체감할

세밀한 서비스와 서울시의 독창적 시도를 병행할 때 초저출생 시대에 실질적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보완과제

서울시의 양육행복도시 정책과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등은 ‘체감형’ 정책으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었으나,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이 요구된다. 이는 점진적 대상 확대를 통한 ‘질적 보편성’의 추구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기준 완화이다. 현재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나 양육지원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만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중산층 이상은 배제된다. 그러나 양육비 부담은 계층을 막론하고 존재하며, 특히 교육비·주거비 부담이 큰 맞벌이 중산층 가구에서도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정 소득 상한선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거나,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보편적 지원에 가까운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돌봄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둘째, 정책 민첩성 강화이다. 현재 서울시의 많은 가족정책은 초기 기획과 집행 후 평가가 뒤늦게 이뤄지거나, 일회성 연구 용역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간평가와 환류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동네키움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와 대기 아동 수를 분기별로 조사해 즉시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불편 사항은 즉각 개선할 수 있는 ‘신속 피드백 루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가족정책 실험실’을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시험하고, 성과가 확인되면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서비스 다양화와 교육 강화이다. 조력자·양육자 대상 안내와 상담, 코칭, 그리고 키즈카페, 자조모임 연계 등은 이미 일부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어 예산과 행정적 지원만 더해진다면 단기간에 확대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도 있다.

넷째, 초저출생 심화에 대응하고 서울형 차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중앙정부의 부모급여 확대, 난임 지원, 공공주택 특별공급과 같은 보편정책과 보조를 맞추되, 서울시는 주거·돌봄·문화 영역에서 ‘서울형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청년 원가주택이나 아이돌봄비 지원과 같은 제도를 한층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은 다자녀 가구를 겨냥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 왔다. 문화·교통 할인 카드 제공, 소득연동형 부모휴가급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이미지 확산 등은 대표적 사례로, 서울시 역시 이러한 요소들을 적극 검토해 한국적 맥락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평가의 전환이다. 단순 산출(output) 지표가 아니라 출산의향, 양육친화도, 돌봄 체감률 등 결과(outcome) 중심의 평가 지표로 개편해야 한다. 다만 이는 중앙부처의 평가체계와 연동되므로, 학계,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계 역시 분명하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은 친족 돌봄 선호로 민간 육아도우미 지원으로의 대체가 쉽지 않고,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소통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따라서 소득·연령 기준을 합리화하여 포괄성을 높이고, 민간서비스형의 비용·품질·편의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심야·긴급 돌봄 연계, 서비스 질 모니터링, 조력자 1:1 코칭 등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협력체계 구축 방향

저출생 극복은 단일 기관이 아니라 정책-학계-현장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와 예산을 조정하고 현장은 가족센터와 돌봄기관이 시민의 수요와 경험을 환류한다. 학계는 단순히 출산율 수치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성을 검증하고 지표화하며 서울가족보고서, 양육자서베이, 국가통계 등을 통합 분석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주체이다. 또한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대안을 설계하고 해외 사례를 한국적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역할도 학계가 수행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수요조사에 머물지 않고 정책 환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학계의 책임이자 기여라고 생각한다. 이에 몇 가지 역할을 제시한다.

첫째, 정책 효과 검증과 근거 기반의 분석을 시도한다. 학계는 단순히 출산율 수치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아이돌봄비, 부모급여, 주거지원 등 정책이 실제로 출산 및 양육 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통계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가족보고서, 양육자서베이, 국가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연계해 다층적·종단적 분석을 수행하고, 정책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을 비교하는 평가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가시화해야 한다.

둘째, 맞춤형 모델 설계와 국제적 적용이다. 학계는 청년층, 청소년 부모, 중장년, 고령층 등 세대별 집단과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맞벌이·외벌이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구분해 맞춤형 정책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의 전주기 동행지원(임신-출산-육아 전과정을 행정과 전문인력이 동행하면서 지원)이나 북유럽의 다자녀 생활지원 정책(세자녀 이상 가구 세제, 공보육 확대, 문화/교통 할인카드-프랑스), 소득연동형 부모 휴가급여(임금의 60~100% 보장-스웨덴·핀란드), 가족친화 근로제도 등(Konrad-Adenauer-Stiftung, 2023) 해외 사례를 단순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의 노동시장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정·적용 가능한 한국형 대안을 설계해야 한다.

셋째, 정책 환류와 사회적 담론 형성이다. 가족센터와 돌봄기관에서 수집하는 시민 경험 데이터를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 모형을 구축하는 것 또한 학계의 역할이다. 아울러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정책을 모듈화해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 가능하도록 체계화하고,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담론을 주도함으로써 성평등한 가족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저출생은 단일 부처나 한 기관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공동과제이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정책 간 분절성과 시민 체감도의 부족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앞으로는 정책-학계-현장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증하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돌봄과 가족지원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의 발표와 토론이 협력의 촉매제가 되어, 서울이 한국 사회 전반에서 가족친화적 돌봄도시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세원. (2025.09.02). 맞벌이 부부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집안일 112분 더한다.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934>
- 안현찬, 김성아, 백선희, 변금선, 신가희, 이창, 허자연, 김현정, 문진영, 이승재, 이정현. (2024). 서울시 양육행복 도시 정책 성과평가 체계 구축과 운영방안. 서울연구원.
- 이윤정. (2017).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스트레스가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 : 아동 양육비 및 돌봄 지원 한부모가족 정책의 조절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55(4), 363-383.
- 이윤정. (2019). 청소년 한부모의 일과 삶의 실태와 현실 :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직업교육 경험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3), 89-107.
- 이윤정. (2024).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정책 지원 효과 :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4(3), 226-251.
- 이재림, 손서희, 신하은, 이지훈, 강주현, 김민식. (2024). 2024 서울가족보고서. 서울특별시.
- 최현희, 고윤정. (2024).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 Konrad-Adenauer-Stiftung e. V. (2023). Pathways to the third child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amily policy measures (N. Klauser & M. Bohrer, Authors). Facts & Findings, No. 517. Konrad-Adenauer-Stiftung. <https://www.kas.de/documents/d/guest/pathways-to-third-child-an-international-comparison-of-family-policy-measures>

토론 5

이현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앞서 세 편의 발표문은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응을 위한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셨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 및 학계, 현장에서 의미있게 활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5 서울가족서베이」는 서울시민의 가족관련 인식과 생활 실태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보여주셨고, 「서울시 (예비)양육자 실태와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는 양육자의 실제 경험과 요구를 통해 제도 개선의 방향을 도출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성과 및 발전 방안」은 틈새 돌봄공백 지원을 위한 친인척 및 민간서비스 활용성과와 과제를 제시해주셨습니다. 모두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이 단순히 출산 장려나 양육 지원 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거, 경제, 돌봄, 일생활균형 등 복합적인 정책 과제와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가 이처럼 다층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설계에서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총괄적 거버넌스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본 토론문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협력 체계 구축과 관련한 몇가지 고민과 제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앞선 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주거 안정 및 경제적 부담 문제, 돌봄 공백 및 인프라 확충 문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공동양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및 주거 불안정은 자녀출산과 양육 결정의 가장 중요한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 및 경제 정책은 저출생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공적 돌봄 시스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돌봄공백 문제는 여전히 맞벌이가구를 힘들게 하는 양육 환경입니다. 양육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 수요에 맞는 틈새 없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야 실질적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실태조사 결과와 그 함의점들을 종합해볼 때, 주거 안정, 출산 양육 비용 부담 완화, 틈새 없는 돌봄 인프라 구축 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사회 문화가 전반적으로 출산양육친화적 방향으로 변화할 때, 앞서 언급한 주거 및 경제 기반, 돌봄 인프라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취할 수 있는 문화, 또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성평등한 문화가 확산될 때 출산 의향이 높아지고, 실제 양육할 만한 환경이라 믿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저출생의 문제의 근원을 진단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의 노력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족정책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몇가지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저출생 대응은 주거 안정-양육 (교육)비 경감-돌봄 지원-부모교육 및 상담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생활 패키지 정책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Family Hub는 0세부터 19세까지의 아동과 가족을 위한 가족 서비스의 계획 및 전달을

지역 기반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No wrong door’ 원칙을 통해 어떤 경로로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가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로서 주거, 경제, 고용, 복지, 교육, 돌봄 관련 부서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총괄 정책 협의체 제도화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가족센터가 가족서비스를 총괄하고 조정하며 연계하는 핵심 허브로서 기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저출생 대응의 핵심은 틈새없는 협력적 돌봄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즉, 돌봄주체로서 공공-민간-지역사회-가족의 돌봄 다이아몬드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협력적 돌봄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와 틈새를 메우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의 목표를 강화하면서, 민간 및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돌봄의 질과 안전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돌봄을 특정 세대나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공공·민간·지역사회·가족이 함께 협력하는 돌봄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민간기관-지역사회 조직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품질 관리와 보상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공동육아 나눔터를 돌봄 거점으로 활성화하여 ‘함께 돌보고 함께 키우는’ 돌봄공동체를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틈새없는 돌봄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가족친화적 문화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출산과 양육 의향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직장내 가족친화제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예전에 비해 증가했다고는 하나, 여성에 비해 저조한 것은 바로 기업 내 분위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장치 마련을 넘어, 근로자가 실제로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재택근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여 일생활균형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정부·기업·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협력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제도 사각지대를 포괄하는 지원책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생활 균형은 사회 전반의 가치와 문화와도 연결됩니다. 가정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돌봄을 분담하는 성평등한 맞돌봄 문화, 직장 내에서 돌봄 책임을 존중하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지역사회에서 부모를 지지하는 돌봄친화적 환경이 함께 구축될 때, 출산과 양육을 ‘하고싶다’,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가족친화문화의 정착은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토대가 됩니다.

끝으로 가족정책 거버넌스 협력의 최종 목표는 수요자인 가족의 건강성 향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개발과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가족 관점의 의사결정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Family Hub가 Parent Panels 등 사용자 참여 구조를 제도화한 것처럼 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채널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가족영향평가(Family Impact Analysis) 제도와 같이, 정책이나 사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가족친화적 정책 실행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사회 정책 전반에 가족친화적 관점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가족정책 거버넌스 협력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문헌

- Bogensneider, K., Little, O. M., Ooms, T., Benning, S., Cadigan, K., & Corbett, T. (2012). The family impact lens: A family-focused, evidence-informed approach to policy and practice. *Family Relations*, 61(3) 514-531.
- Department of Education (2023). Family hubs innovation fund evaluation. London: UK Government Social Research Department of Education.
- 이현아(2012). 가족영향평가 도입방안 탐색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0(7), 97-107.

2025 서울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

서울시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
가족분야 현장·학계·정책 협력 체계 구축

발행일 | 2025.10

발행처 | 서울시가족센터

기획·편집 | 가족서비스과

주 소

-1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4길 6

-2센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10

전 화 | 02-318-0227

팩 스 | 070-7469-0228

홈페이지 | www.familyseoul.or.kr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서울시가족센터에 있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본 자료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2025

서울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

서울시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
가족분야 현장·학계·정책 협력 체계 구축